제 7 절

건설방재 행정

1. 균형있는 지역개발
2. 도로망 확충 및 교통질서 확립
3. 주택의 안정적 공급 및 낙후지역 개발
4. 재난재해 관리
5. 토지정보의 고도화를 통한 토지의 가치 창출
6. 영산강 살리기 추진
7. 공동혁신도시 건설

제7절 건설방재 행정

1. 균형있는 지역개발

1-1. 지역개발의 활성화

가. 주요 SOC시설의 획기적 확충

(1) 도로건설

서해안 고속도로는 2001년 말 88올림픽 고속도로 및 장성~담양간은 2006년에 완공하였으며, 2007년에는 고창~장성, 2008년에는 무안~광주간을 개통하였고, 목포~광양간, 전주~광양간은 공사 중에 있다. 또 광주~완도간은 '05. 6월 기본설계를 착수하여 '09. 12월 완료 및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이다.

국도 77호선 등 4차로 개설, 국도 2호선 등 대체 우회도로 개설, 화원~삼포 등 국가지원지방도 계속사업 5지구, 신규사업 4지구와 유치~이양간 등 지방도 3개 지구가 시공 중이며,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통한 도로망 확충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표 2-352> 연도별 도로현황

(단위 : ㎞, %)

구분 / 도로별	2006		2007		2008	
	연 장	포장률	연장	포장률	연장	포장률
계	10,107	68.4	10,112	68.6	10,163	69.8
고속도로	208.3	100	208.3	100	267	100
국 도	2,009.1	94.4	2,015	94.4	2008	94.6
지 방 도	2,293.4	70.1	2,293.4	70.1	2295.9	70.8
시 군 도	5,596.2	57.2	5,596.2	60.8	5592.2	59.1

※ 당해연도 12. 31 기준

<표 2-353> 사업추진 실적(2008년)

(단위 : ㎞, 억원)

도 로 별	사 업 량		사 업 비
	지 구 수	연 장	
총	373	1,410	96,167
고 속 도 로	4	355.4	26,936
일 반 국 도	92	657	47,125
시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	14	55.3	10,863
국 가 지 원 지 방 도	15	74.30	9,087
지 방 도	36	12	804
군 도	71	116	594
농 어 촌 도 로	141	140	758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장 전승현,
도로공항계획담당 고성석, 담당자 이군행

(2) 철도건설

1) 보성~임성간 철도신설

목포권과 광양만권을 연계하는 철도망 구축과 동서간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98. 12월 확정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반영되었고, 2000년도에 기본계획(용역비 40억원) 완료 및 경제성(B/C 1.04)이 인정 되어 2003. 12월 2개 공구 10.4km가 턴키공사로 착공되었고 잔여 5개 공구 72.1km는 기타공사로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광양~목포간 수송거리가 153.0㎞에서 82.29㎞로 70.71㎞가 단축되고 수송시간도 3시간 30분에서 2시간으로 1시간 30분이 단축되어 전남 서남부지역과 동부 지역간 개발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2) 호남고속철도 건설

서울~목포간 352㎞ 호남고속철도 건설은 경부고속철도와 양축을

형성하여 국토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부고속철도의 사업계획이 경제현실에 맞게 재조정됨에 따라 호남고속철도도 '99년말 까지 사업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작업을 마치고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에 반영되었다.

2003. 11월까지 50억원을 투입하여 기본계획 조사연구 용역을 완료하였고, 2004. 10월 중부권 분기역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조사연구 보완용역을 시행하여 2005. 6월 중부권 분기역을 오송역으로 확정하였으며, 2006년 8월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2006. 11월부터 기본설계를 시행하여, 2008. 11. 28 완료, 12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중에 있다.

3) 전라선 복선 전철화

신리~동순천간 122.6㎞ 전라선 철도개량사업은 날로 증가하는 광양만권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사업으로 '88. 12월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89. 11월 1단계 공사(병목구간 64.3㎞)를 착수하여 '99. 5월 완공 개통하였고, 2단계구간(기타 구간 58.3㎞)도 '98. 6월 착공 후 완료하여 현재 운행중에 있다.

이 구간의, 복선전철화 사업도 '01. 12 ~ '04. 12월 실시설계 완료 후 '05. 7월 착공하여 201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복선전철화가 완료되면 KTX 운행은 물론 수소능력 향상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순천~여수간 40.0㎞에 대해서는 3개 공구로 분할, 성산~신풍간 1공구와 여천~여수간 3공구는 '02년 턴키공사로 발주되었고, 신풍~여천간 2공구는 '03년 실시설계 완료 후 착공하였으며, '07년 전철화 설계 후 2011년 전철화 개통을 목표로 현재 55% 공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다.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장 전승현,
도로공항계획담당 고성석, 담당자 최연홍

(3) 공항 건설

1) 여수공항 확장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 율촌 1·2산단 조성, 광양컨테이너부두 건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등 광양만권의 개발에 따른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97. 12월 실시설계를 마치고, '98. 8월부터 용지보상을 시작하여 '99년까지 1,022 필지에 대한 보상비 440억원을 지급 완료하였다. '98년 12월부터 공사에 착공하여 2004년 11월 신설 활주로와 관제탑을 완공하고 2005년 11월 여객터미널 계류장 주차장 등을 완공, 동월 24일 개청식을 개최하였다. 여수공항 확장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투자활성화는 물론 수도권 등과 육상교통이 불편한 여수, 순천, 광양지역의 항공 교통수요 처리능력이 향상되었으며, 활주로 추가확장이 이루어지면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는 물론 한려해상공원을 찾는 관광객 유치에 많은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무안국제공항 건설

대불·삼호산단의 활성화와 한·중 경제교류 활성화 등으로 국내·외 항공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광주공항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호남권의 중심거점 공항건설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98. 10월까지 기본설계를 마쳤으며, '98. 12월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여 실시하는 턴키방식을 채택 '98. 12월에 착공, '07년 11월에 준공과 함께 개항되었다.

본 국제공항 완공으로 호남권 거점항공수요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한·중 교류확대, 서남권 투자활성화, 농산물 수출 여건개선으로 지역개발 촉진과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장 전승현,
도로공항계획담당 고성석, 담당자 최연홍

(4) 호남권 복합화물 터미널 건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물류거점시설 확충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97년 12월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및 민간투자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호남복합물류(주)를 민간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였다.

2000년 실시설계와 2002년 용지매수를 완료한 후 2002년 12월 착공하여 2005년 5월 1단계 74천평을 준공하여 영업을 개시하였고, 2006년부터 2단계 84천평 공사를 착수하여 2010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의 물류체계를 단순화 내지 집약화 시킴으로써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주민 고용증대와 지방세원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장 전승현,
교통기획담당 김태형, 담당자 김범석

나. 건설업체 등록관리

2008. 12. 31현재 일반건설업체는 976개업체, 전문건설업체는 2,682개 업체가 등록되어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표 2-354> 연도별 건설업체 등록추세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일 반	985(증2.9%)	993(증0.8%)	976(감0.9%)
전 문	2,686(-)	2,653(감1.1%)	2,682(증1.1%)

부실건설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건설업체 자진반납 등으로 지난 '99년 등록제로 전환 후 급격히 증가하였던 건설업체가 2002년 부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체의 난립으로 그동안 문제 되었던 부실시공 또는 과다한 경쟁으로 인한 건설시장 질서문란 등이 개선되어 건실한 건설산업 발전과 부실공사의 예방이 기대된다.

<표 2-355> 2008년도 건설업체 행정처분 현황

계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 · 과태료
231업체	59	33	139

한편, 2008년 한 해 동안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체는 등록말소가 59개 업체(기준을 미충족 24개 업체, 자진 반납 35개 업체), 영업정지 33개 업체(등록기준 미달 등)이며 하도급계약 발주처 미 통보 등 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139개 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건설방재국 지역계획과장 위광환,
건설정책담당 윤승중, 담당자 안명권

다. 건설기계관리

도내 영세 건설기계 사업자의 보호 육성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 개선시정 함은 물론 건설기계 사업자 신고 처리기간을 법정처리 기간의 1/3 이내로 단축 시행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표 2-356> 건설기계 등록현황

(단위 : 대)

계	불도저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덤프트럭	기중기
21,350	171	8,206	963	5,805	3,251	556
모터그레이더	로울러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휘니셔	아스팔트살포기
21	258	1,436	238	2	35	5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및항발기	사리채취기	준설선	특수건설기계
23	226	122	9	1	8	14

<표 2-357> 건설기계 사업자 신고현황

(단위 : 업체)

계	건설기계대여업			건설기계정비업	건설기계매매업	건설기계폐기업
	소계	일반	개별			
545	379	225	154	98	34	34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장 전승현,
교통행정담당 김태형, 담당자 김범석

라. 부실공사 방지대책 추진상황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도내 5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95년부터 건설현장 불시 기동감찰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다.

○ 시 기 : 년2회(5월, 10월)
○ 대 상 : 도내 5억원이상 건설공사
○ 기술 및 의식교육실시 : 2,523회 119,675명(2008년 1회 1,468명)
○ 건설공사 현지 확인점검 : 100회 2,684개 현장(2008년 2회 20개 현장)
- 지적건수 : 18개사업 49건, 업체조치 22개사(시공사13, 감리사9)

재정상 조치 18개소 882백만원 (감액 658, 재시공 224)
- 업체조치 : 22개사(시공사 13, 감리사 9)



건설방재국 지역계획과장 위광환,
기술심의담당 김용철, 담당자 최환

1-2.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현황

우리 도 개발제한구역은 광주권 287.11㎢를 '73. 1. 17일 지정관리하였으나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침에 따라 '01. 5. 3 나주 학림마을 등 경계선 관통취락 3개소, 0.045㎢를 해제하고 구역 내 20호 이상 집단취락 212개소, 10.40㎢를 2004년 말 해제하였으며, '06. 12월 나노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장성진원·남면일원 0.807㎢를 해제하고 2008년까지 50호 이상 집단취락지구 단위계획 수립 시 3.582㎢를 해제하여 '08년 12월말 현재 272.28㎢를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표 2-358> 광주권 개발제한구역지정 시·군별 현황

(단위 : ㎢, 가구, 명)

구분 \ 시군		계	나주	담양	화순	장성
면적	당초	287.11	42.9	115.18	41.70	87.33
	현재	272.62	39.54	109.19	41.26	82.29
가구	당초	10,127	2,331	4,415	354	3,027
	현재	363	36	180	13	134
인구	당초	26,196	5,682	11,602	965	7,947
	현재	1,820	229	799	37	655



건설방재국 지역계획과장 위광환,
도시계획담당 고성석, 담당자 이범재

나. 개발제한구역 관리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연 단속요원 80명, 단속장비 87대 등을 투입하여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계표석 1,807개소, 초소 22개소, 입간판 115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초소, 경계표석, 입간판 등은 집단취락이 해제됨에 따라 2007년까지 665백만원(국비50%,시군비50%)을 투입하여 해제지역에 대한 표석 이전 및 보수를 전면 실시하였다.

또한 '08년도에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나주시 등 4개 시군 31개 지구에 국비 48억원과 시군비 21억원을 등 총 69억원을 투자하여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에 따른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차원의 단속에 주안점을 두고 시군, 국토부, 도에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86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하여 자진철거와 원상복구 조치하였다.



건설방재국 지역계획과장 위광환,
경관도시계획담당 최태근, 담당자 이범재

1-3.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개발 추진

가. 효율적인 택지개발 사업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인구의 증가 및 핵가족화로 인한 도시 주택난을 해결하고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택지조성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우리 도내에 추진한 택지개발사업은 3종의 사업으로 총 74지구 35,515천㎡, 투자사업비는 1조1천억 규모이며, 유형별로 분류하면 택지

개발사업 23지구, 도시개발사 업 17지구, 구획정리사업 34지구이다.

추진내역별로 구분하면, 사업완료가 59지구 20,386천㎡, 추진중인 사업은 16지구 이며 추진중인 사업을 유형별로 보면 택지개발사업 4지구, 도시개발사업 6지구, 구획정리사업 6지구이다. 신규 추진중인 사업지구도 8지구로서 택지개발 2지구, 도시개발사업 3지구, 구획정리 3지구로 주택용지 수요에 대처해 나가고 있다.



건설방재국 지역계획과장 위광환,
건설정책담당 김용철, 담당자 유호규

나. 도시계획 및 자전거 도로 사업 추진

(1) 도시계획도로 사업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개설률이 낮고 이미 시설되어 있는 기존도로의 노폭도 협소하여 시가지 교통난이 심화되어 감에 따라 도시 도로망의 확충과 도심 교통 정체구간 해소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시구역내 도로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도시별로 교통정체 심화구간 및 병목현상 발생구간을 우선 시행하여 왔으며, 사업비 투자도 2007년에 2,104백만원, 2008년에 2,870백만원을 투자하는 등 시가지 교통난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표 2-359> 도시계획도로 추진현황

(단위 : ㎞, 백만원)

구 분	계		2007년		2008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5.11	5,284	1.16	2,104	21.3	2,870
시 도	2.80	1,530	0.35	449	17.5	340
읍면도로	2.31	3,754	0.81	1,655	3.8	2,530

(2) 자전거 도로사업

정부에서 추진 중인 녹색 뉴딜 사업과 연계하여 도심지의 심각한 도시교통 및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도민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타기 생활화 운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우리 도에서는 현재까지 자전거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자전거보관대, 횡단보도 턱 낮추기, 자전거 안전표지판 설치, 자전거 도로정비 등을 위하여 전남도내 22개 시군 911㎞에 대하여 1,333억원을 투입하였으며

또한 정부에서 올해 추진중에 있는 전국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09~'18) 과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는 서남해안 일주도로를 위주로 건설하되 국민적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큰 관광·문화명소와 연계하고 생태자원, 해안절경, 섬 일주도로 등과 연결하여 도로의 연속성 확보는 물론 대중교통과 연계성, 주민생활편익 등을 고려하며 관광레저 등을 포함해 폭 넓게 접근 추진한다는 계획으로

서남해안권 영광~목포~진도~고흥~여수~광양을 연결하는 1,476㎞ 구간과 담양댐에서 영산강 하구둑까지의 영산강권 253㎞(양안)에 대한 전라남도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 구상(안) 을 수립하여 정부에 건의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금년도 본 예산에 33억원을 반영하여 출·퇴근자가 많고 교통정체가 심각한 도내 5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1개구간을 선정 자전거 전용도로 시범지역 을 년말까지 추진함으로서 타 시도에 비해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우위를 선점할 계획이다.



건설방재국 지역계획과장 위광환,
지역개발담당 김용철, 담당자 최 환

다. 국토계획의 페러다임 변화

(1) 도시계획분야

'03. 1. 1 제정·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종전에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으며, 관리지역에 대하여는 2008. 12. 31까지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미 세분된 관리지역에 대하여는 2009.1.1일부터 보전관리지역의 행위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도시의 급속한 발전이 예상되는 광주광역시 연접 시군과 10만 이상 도시, 기업도시가 지정된 군지역 대하여는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전 시군에 대하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선 계획 후 개발 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된 지역은 12개 시·군으로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시와 담양·화순·함평·장성·해남·영암·무안군이며, 도시(군)관리계획은 목포·여수·순천시와 곡성·영광·영암·해남·장흥·함평군 등 9개 시·군이 완료되었고 2009년 상반기까지 전 지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그리고 주민불편해소 및 투자유치와 관광단지 조성 등 토지규제 완화를 위하여 11개 시군에 계획된 수산자원보호구역 2,166㎢중 564㎢를 해제하였으며, 2008년 한 해 동안 도시계획위원회를 32회를 개최하여 총 154건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을 추진하였다.

(2) 광역도시계획분야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 시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것으로 향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우리 도에는 광주권과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도청이전과 함께 서남권을 중심으로 한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 4월중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먼저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은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나주시·담양군·장성군·화순군 전 지역과 함평군 해보·월야·나산면 일부지역을 포함한 2,995㎢이며 계획기간은 2020년, 계획인구는 220만명으로 2003년 9월 24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조정과 광역시설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한 것으로 집단취락 209개소 10.89㎢와 일반 조정가능지역 33개소 9㎢ 지역현안사업 2개소 0.83㎢가 반영되었으며

광역시설로는 광주외곽 순환고속도로 계획과 광주~완도간 광주~무안간고속도로, 경전선 직복선화 및 지하철의 나주·화순 연장 등이 반영되어 있다.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은 여수·순천·광양시 등 3개 도시의 연담·광역화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광양만권 전역이 포함된 5,279㎢이며, 계획기간은 2025년 계획인구는 115만명으로 2006.5.4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과 2012 여수세계해양박람회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과 도로·철도 등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데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을 국제교역 및 국제문화 배후도시로 성장 시키고 전주 여수 간 고속도로와 목포 광양 간 고속도로를 계획하였으며 여수-묘도-광양을 연륙하여 순환도로 체계를 갖추고 3개 시를 순환하는 경전철을 계획 하였으며 광양항을 국제교류 허브항으로, 여수항을 관광허브항으로 개발한다는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서남권 광역도시계획은 도청이전, 기업도시와 무안국제공항건설 등

서남권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계획으로 목포, 무안, 영암, 해남군 전 지역과 완도·진도·신안 일부지역이 포함된 3,711㎢을 2025년 100만명의 인구를 갖는 광역도시를 성장시키겠다는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계획으로 2007. 9. 4 국토해양부로부터 권역지정 승인을 받았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2순환 6방사형의 교통축과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 무안공항과 남악 등을 연결하는 경전철 건설 계획이 반영되었으며, 섬 개발의 활성화와 국비지원을 위하여 다도해 특정지역지정 계획과 영산강 살리기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반영되어 있다.

광역도시계획은 시·군에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각종 개발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고, 국가계획 수립 시 광역도시계획을 근거로 수립하게 되며, 자치단체 간에 대립되는 대규모 시설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계획으로 계획 간에 협의 조정은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통하여 조정해 나가고 있다.

(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해소를 위해 불요불급하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과감히 해제 또는 조정하고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은 가급적 존치하였으며 면급 도시 내 사유토지로서 급경사지에 결정되어 사실상 조성이 어려운 어린이 공원은 폐지하고 시군 재정여건상 대지에 대한 보상계획과 또는 재원 조달계획을 포함하여 실현가능한 집행계획이 수립될 수 없는 시설은 원칙적 폐지 검토하였고 '08년 12월말 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에 대하여 매수 청구된 토지는 171건, 19천㎡에 669억원이 청구되어 11천㎡를 499억원을 투입 매수하였으며 잔여 매수 청구된 토지는 매수여부 결정 후 조치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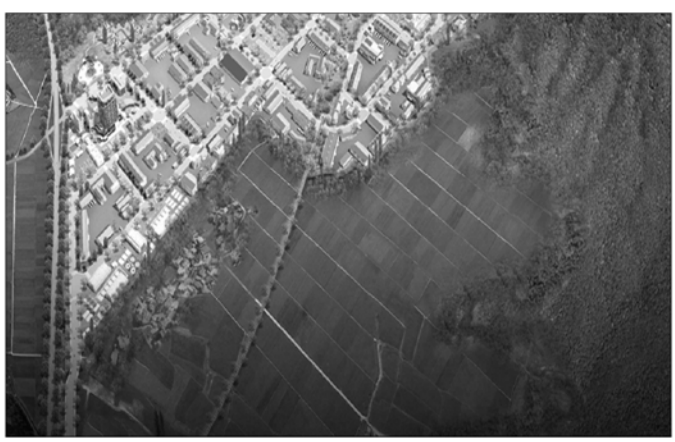
건설방재국 지역계획과장 위광환,
경관도시계획담당 고성석, 담당자 정영덕

1-4. 산업단지 조성

가. 해당일반산업단지 조성

해당일반산업단지는 낙후된 중남부권에 산업입지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2006년 중남부권 일반산단 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토대로 전남개발공사에서 장흥군 장흥읍 해당리 일원 292만㎡(88만평)의 부지에 총사업비 2,754억원을 투입하여 장흥군의 특성을 고려한 한방생약산업 중심의 음식료품 제조, 화합물, 조립금속산업 등을 유치할 계획으로 연간 약 1조원의 생산과 약 1만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산단은 토지 이용계획상 산업용지가 41.5%, 공공시설이 12.7%, 골프장이 24.7%, 공원 및 녹지가 18%, 지원시설 등이 3.1%로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룬 친환경 산업단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공원 및 녹지의 비율을 법정면적인 7.5~10%보다 훨씬 높은 비율인 18%로 확보하였으며, 산업단지의 기능을 제고하고 초기 분양률을 높이기 위하여 단지 내에 18홀 규모의 퍼블릭 골프코스를 갖춘 선진국형 복합단지 개념을 도입하였다.



이는 예전에는 공업용지의 제공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산업단지 내에 교육·주거·문화·관광·체육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배치한 복합단지로 건설하는 것이 대세로 국내의 경우 충남 석문국가산단, 해외의 경우 프랑스 메쯔테크노폴 2000, 스페인 안달루시아, 중국 중관촌, 싱가폴 주롱의 사례를 우리 실정

에 맞도록 접목시켰으며, 특히 장흥군에서 추진 중인 로하스시티(은퇴자 도시), 우드랜드 등과 연계하고, 중남부권의 산업여건 특성상 다른 지역에 비해 분양가격을 크게 낮출 필요가 있어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골프코스를 계획하였으며 골프장으로 인하여 약 30%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방재국 지역계획과장 위광환,
산단조성담당 김양수, 담당자 김진수

나. 강진일반산업단지 조성

전라남도에서는 투자유치 총력의 해를 맞아 전남 중·남부권 중앙에 현재 운영 중인 산업단지와는 차별화된 친환경 산업단지 개발을 노력한 결과 2008년 7월 (주)서희건설, 새천년종합건설(주), 혜성건설(주) 등과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투자이행협정(MOA)을 체결하였고, 전남 최초로 강진군과 민간개발업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합동개발(제3섹터) 방식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강진 성전 일반산업단지를 추진하게 되었다



강진 성전일반산업단지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첨단 환경산업 멀티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강진군 성전면 금당리 일원 1,484천㎡(449천평)에 총 사업비 1,57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환경, 태양광 부품, 조선기자재 산업 등을 유치하여 연간 약 1조 5

천억원 생산과 약 5천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현재 6개 환경기업(156천㎡)과 MOU가 체결되었고 환경기술종합지원센터 건립으로 환경기술개방실험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분소, 시험 생산동 설치, 환경산업 관련 신기술 교육 등이 함께 이루어진 원스톱 시스템이 구축된다.

성전산업단지는 2009년 상반기 착공하여 2011년까지 조성 완료계획이며, 2009년부터 공사 추진상황에 따라 분양이 가능하므로 도내 산업용지 공급 해소와 지역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며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으로 비교 우위를 갖춘 입지경쟁력을 확보하여 중남북권의 산업발전 신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방재국 지역계획과장 위광환,
산단조성담당 김양수, 담당자 최연호

다. 삼호일반산업단지 개발



삼호일반산업단지는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일원에 2,914천㎡(89만평)의 부지를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조선전문산업단지로 조성 중으로 1991년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되어 1992년 6월 착공하여 1998년 12월 준공되었다. 최초 한라중공업에서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IMF 경제위기를 거치며 2002년 5

월 현대중공업의 계열로 편입되어 2003년 1월 현대삼호중공업으로 사명이 변경되었다. 이후, 업계 최단기간 1,000만 DWT 건조기록달성, 10억불 수출의탑 수상, 업계 최단기간 2,000만 DWT 건조기록달성, 선박육상건조 사상 세계최대급 선박인 16만 5천톤의 유조선을 건조, 2008년 12월 올해의 최우수선박에 자동차운반선과 원유운반선이 선정됨에 따라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삼호일반산업단지에는 Dock 2개소, 선박육상건조장 1개소와 골리앗크레인 5기 등으로 연간 98만톤의 강재를 사용하여 8일에 1척씩 연간 45척의 선박을 선주들에게 인도하고 있으며 선박기자재의 국산화율은 84%에 이르고 있다. 1999년 3,327명의 산단 종사자들이 2008년 말 12,116명으로 8,789명이 증가하였으며, 연간 5,783억원의 급여 및 인건비를 지급하고 지난 10년간 8,800여명을 추가 고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9년 2월 현재 수주잔량은 143척에 150억 달러로 세계5위의 조선소로 발돋움 하였으며, 단지 내 시설용지 재배치와 공유수면매립을 통한 산단 면적 확대를 통하여 2011년 연간 54척 건조, 6조원 매출을 목표하고 있다.



건설방재국 지역계획과장 위광환,
산단조성담당 김양수, 담당자 김진수

라. 여수국가산단 주변마을 이주대책

정부에서는 여수국가산단 주변마을 이주 대책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96. 9. 20 여수국가산업단지를 대기보전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대기배출 시설기준을 강화하였으며, '96. 9~'97. 4월까지 정부 주관 하에 민·관합동 정밀조사를 실시하였고, '97. 12. 16 행정자치부가 이주 기본설계비 5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여 이주 대책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99. 6. 11 관계부처 차

관회의를 개최하여 이주대책을 확정하고, 2000년 국토해양부 국고 13억원을 투입 2001년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1. 11월 국무조정실 및 주관 관련부처 회의에서 입주업체 부담 간접보상비를 제외한 주체별 비용부담방안을 확정하였으며 2002년 12월말부터 보상 및 이주가 시작되었다.

2003년 10월에는 국무조정실 주관 회의에서 간접보상비 정부예산 지원방안이 확정되어 간접보상비를 지급하게 되었으며 2004. 7월에 연관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착수하여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이주대책 추진개요

- ○ 대　　상 : 6개마을(평여, 월하, 중흥, 두암, 적량, 주삼) 1,791세대
- ○ 이주대책비 : 5,148억원(국가 2,731, 지자체 1,947, 입주업체 등 480)
- ○ 이 주 기 간 : 2002~2010(9년간)
  - 이주택지조성(여수시 장성, 화장, 도원, 웅천, 죽림지구)



건설방재국　지역계획과장 위광환,
산단조성담당 조태용,　담당자 임용래

1-5. 농공단지 현황

가. 농공단지 조성현황

우리 도의 농공단지는 지난 1984년부터 조성을 시작하여 2008년 말 현재 21개 시·군 45개 단지 8,183천㎡가 지정이후 37개 단지가 조성완료 되었고 8개 단지가 보상 및 조성 중에 있다.

규모는 165천㎡ 미만 28개소, 165천㎡ 이상~331천㎡ 미만 14개

소, 331천㎡ 이상 3개소로 331천㎡ 미만이 전체 93%를 차지하고 있다. 농공단지 조성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은 목포시로 1개 단지 530천㎡이다.

그리고 군단위에서는 무안군이 4개 단지 1,004천㎡로 가장 넓고 가장 적은 면적은 강진군이 1개 단지 56천㎡이다.

그리고 2008년 말 보상 및 조성중인 8개 농공단지 중 5개 단지(무안청계 2, 담양 에코-하이테크, 장성동화 전자종합, 고흥 동강, 화순 쌍옥)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이며, 3개 단지(나주 문평, 영광 칠곡, 신안 지도)는 민간개발방식으로 시행중에 있다.

신규 농공단지는 전남 서남권을 중심으로 조선관련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조선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전망이며, 장성, 담양 등 광주 인근지역은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등 부품소재 산업의 발전이 예상된다. 연도별 농공단지 조성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360> 연도별 농공단지 지정 현황

(2008. 12월말 기준)

구 분	소 계	'84~'87	'88~'90	'91~'93	'94~'97	2005	2006	2007	2008
단 지 수	45	7	21	5	2	5	1	1	3
면적(천㎡)	8,183	1,882	3,035	920	373	1,186	283	70	434

나. 분양현황

2008. 12월 현재 조성 완료된 농공단지 37개 단지의 분양률은(조성중인 8개단지 제외) 99%이며 5개 농공단지(보성 미력, 화순 이양, 완도 완도, 완도 죽청, 진도 고군)를 제외하고 도내 모든 농공단지는 100% 분양을 완료한 상태이다.

<표 2-361> 농공단지 분양 현황

(2008. 4분기 기준)

구 분	지정면적 (천㎡)	조성완료 (천㎡)	분 양 현 황				평당분양 가격(천원)
			분양대상	분양면적	미분양	분양률	
농공단지	45개단지 8,183	37개단지 6,462	5,291	5,239	52	99.0	100

1-6.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추진

가. 광역권 개발계획

광주·목포권 광역개발 계획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발주하여 우리 도내 목포시 등 2시(목포·나주) 8군(담양·장성·화순·함평·무안·영암·해남·신안)과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4,977㎢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도로, 철도, 항만 등 13종 85개 사업에 29조 7,540억원(전남 70개 사업, 23조 8,822억원, 광주시 15개 사업 5조 9,041억원)의 투자계획을 마련하여 '97. 2. 26 국토해양부에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함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중앙관계부처의 협의를 완료하고, '98. 12. 29 개발계획을 확정고시하였다.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은 우리 도 광양만권 지역을 대상으로 광주·목포권과 함께 '95. 12. 29 광양만권 개발계획 수립하여 동부지역인 4시 3군 2,694㎢의 면적을 대상으로 국토해양부에 승인 요청을 하였다.

'95. 12. 23 경남도에서 광양만권에 진주권의 2시 2군 1,850㎢를 포함해 주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함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국토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진주권을 포함시키는 방향을 우리 도에 협의해 옴에 따라 다가오는 21세기를 앞두고 영·호남 갈등 해소와 국가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 개발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광양만·진주권 공동개발이 합의됨에 따라 광역권 명칭을 광양만·진주권으로 변경하고 양 도가 공동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도 3시(여수·순천·광양), 2군(고흥·보성), 경남도 2시(진주·사천) 2군(하동·남해)을 포함하여 총 4,544㎢의 면적에 대하여 '99. 3. 2 국토해양부에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국토해양부에서는 15개 분야 131개 사업에 30조 3,280억원(전남 67개 사업 21조 7,201억원, 경남 58개 사업 5조 8,100억원, 공동개발 6개 사업 2조 7,979억원)의 개발계획을 확정 고시하였다.

'98년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계획(1999-2011)수립 이후, '00년 제4차 국토종합계획, '02년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04년 제4차 국토 종합계획 수정계획 등 상위계획의 변경에 따라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06년 11월 우리 도, 경남 도, 국토해양부가 협약을 체결하여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계획 변경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지난 '08.12월에 국토해양부에 승인 신청하여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본 계획이 승인되면 앞으로 사회간접 자본 시설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광역권 개발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 협의하여 환태평양, 환황해 경제권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방재국 지역계획과장 위광환,
지역개발담당 김용철, 담당자 최 환

나. 개발촉진지구 지정·개발

개발촉진지구 선정기준은 지정목적에 따라 낙후지역형, 도농통합형, 균형개발형 등 3가지로 분류된다.

낙후지역형은 개발수준이 타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

으로 인구증가율, 재정자립도, 제조업인구 비율, 도로율, 평균지가 등 5개의 지표 중 2개 이상이 전국 하위 20%에 속하는 지역이 해당되며, 도농 통합형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설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도시에서 새로운 소득기반조성을 위하여 인근지역과 연계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해당된다.

균형개발형은 광역개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 대상이 된다.

위 3가지 유형 중 중앙정부의 집중지원이 보장되는 개발형태는 낙후지역형으로 우리 도에서는 개발대상지역을 낙후지역형으로 선택하여 광역개발권역에서 제외된 10개 군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1차년도에 신안·완도, 2차년도에 곡성·구례, 3차년도에 장흥·진도, 4차년도에 보성·영광, 5차년도에 화순·강진, 6차년도에 장성으로 연차적 지정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동안 우리 도의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2-362>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현황

구 분	대상지역	지 정 면 적	사 업 계 획	사업기간	총사업비 (억원)
1차지구	신안·완도	180㎢	완도~신지, 암태~팔금연륙(연도)교 등 3개 사업	1996~2008	1,390
2차지구	곡성·구례	234㎢	고달~산동간 도로 개설 사업 등12개 사업	1997~2008	3,367
3차지구	장흥·진도	210㎢	회진~용산간도로 개설 사업 등 23개 사업	1999~2008	2,404
4차지구	보성·영광	240㎢	금천~옥전간 도로개설 사업 등17개 사업	2002~2007	1,733
5차지구	화순·강진	238㎢	화순 군도11호선 도로개설 사업 등 34개 사업	2002~2010	1,333
6차지구	장성	78㎢	홍길동 테마파크등 20개 사업	2008~2017	10,229

2008년 12월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장성군은 관련공사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중에 있으며, 고흥군에서는 도양읍 등 8개 읍·면 125㎢에 대하여 금년 10월중에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목표로 하여 관련 용역을 추진중에 있다.

앞으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되면 낙후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지역균형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방재국 지역계획과장 위광환,
지역개발담당 김용철, 담당자 최 환

2. 도로망 확충 및 교통질서 확립

2-1. 지방도로 유지관리 정비

2003년 93억원 2004년 425억원 2005년 174억원 2006년 178억원 2007년 158억원 08년 160억원 등 연차적인 사업비를 투입하여 소파보수 5,812㎞, 미끄럼방지시설 및 덧씌우기 100㎞, 사리부설 34㎞, 교량보수 22개소, 차선도색 328㎞, 도로표지판 정비 123개소, 굴곡위험도로 17개소를 정비하였다.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장 전승현,
도로시설담당 이상표, 담당자 이종현

2-2.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가. 벽지 및 오지·도서 교통지원

우리 도는 타도에 비해 벽지 및 오지·도서가 많고 농어촌버스 업체의 규모가 영세하여 대부분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역의 교통 편의를 위해 수익성이 없는 벽지노선에 농어촌버스를 운행토록 하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확대 지원 하였으며, 이용객 감소로 운행결손이 심하여 버스 운송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노선에 공영버스를 투입하여 벽지 및 오지·도서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대중교통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363> 연도별 공영버스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공 영 버 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정부예산	우리 도 예산	지원대수	지원노선수	손실보상금
2003	540	-	30	395	4,219
2004	360	-	20	407	4,300
2005	342	-	19	412	4,232
2006	339	-	22	428	6,332
2007	457	-	25	502	6,407
2008	543	-	30	530	8,408

나.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 교육

자동차 운송사업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이용객에 대한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18,44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연수원의 운영비 550백만원을 보조하였다.

<표 2-364> 연도별 운수종사자 교육실적

(단위 : 명)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
계	20,169	18,710	18,397	18,444	18,180
신 규 채 용 자	1,253	1,167	1,014	1,071	989
보 수 교 육	18,916	17,543	17,383	17,373	17,191

<표 2-365> 연도별 교통연수원 운영비 보조현황

(단위 : 백만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
380	400	550	550	600

2-3. 교통체계관리 개선

우리 도의 교통체계 관리개선 사업은 저비용 투자로 단기적인 교통편익을 얻기 위하여 기존 시설을 이용한 서비스의 극대화에 초점

을 두고 교통신호기, 신호등, 교통안전 표지판 등을 교체・신설하고 있다.

2008년에는 신호기 22,157개소, 교통안전표지 58,178, 노면표지 10,010, 보행자신호등 59, 잔여시간 표시기 201개소,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109개소를 교체 신설하였다.

또한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교통사고 잦은 지점 및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57개소, 어린이 보호구역 개설사업 119개소 등을 대폭 정비・확충하였다.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장 전승현,
교통행정담당 김태형, 담당자 조창문

2-4. 선진 운송질서 확립

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적극 추진

우리 도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감소시키기 위해 교통사고 줄이기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2008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1.2% 감소하였으며 사망자수는 534명에서 483명(9.6%)으로 크게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도에서는 범도민 의식개혁운동과 사업용 차량 무사고 100일 운동 및 매월 교통사고 「확」 줄이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도로환경개선을 위해 위험도로, 사고 잦은 곳,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등에 지속적인 투자와 교통시설물을 정비개선하고 있다.

아울러 교통사고 줄이기 일환으로 국토해양부와 우리도가 공동으로 매년 교통안전 우수회사를 선정하여 우수인증마크 차량 부착 및 계절별 안전점검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표 2-366> 연도별 도내 교통사고 현황

(단위 : 건, 명)

구 분	발생건수	사 망 자	부 상 자
2008	10,468	483	17,953
2007	10,591	534	18,087
2006	10,497	508	17,949
2005	10,373	533	17,178
2004	10,923	579	17,967
2003	11,919	571	19,119
2002	11,150	636	16,927

※ 2008년도는 전년대비 교통사고 발생 1.2% 감소, 사망자수는 9.6% 감소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장 전승현,
교통행정담당 김태형, 담당자 조창문

나. 교통법규 위반차량 지도단속

교통난 해결의 최우선 과제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확보에 나서는 한편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를 확충하고 단속공무원도 증원 시켰다.

또한 테마별로 지도단속을 본격 가동하면서 교통불편신고센터 상시 운영, 교통법규위반차량 신고엽서제 활용, 대중교통의 운전자 실명제 및 CCTV설치 등 강력한 지도단속을 펼친 결과 2008에는 118,463건을 적발하였다.



건설방재국 도로교통과장 전승현,
교통행정담당 김태형, 담당자 김범석

3. 주택의 안정적 공급 및 낙후지역 개발

3-1.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가. 추진배경 및 방향

지난 수십년간 지역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중앙주도 하향식(Top-Down) 지역개발로 개성없는 양적인 성장만을 추구한 결과 농산어촌은 산업기반구축 미흡과 심화되는 인구감소로 지역공동체 존립기반이 흔들리면서 삶의 질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따라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행정이 주도하는 하향식 개발이 아닌 지자체·지역주민·지역전문가들의 역할분담 및 협력적 파트너쉽이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개발이며, 사업의 내용에 있어서도 가시(하드웨어)적인 물리적 개발이 중심이 되기보다는 주민의 편의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비가시(소프트웨어)적인 요소들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Making a great place to live)란?

- 각각의 지역들이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주민과 지역사회 스스로가 생활 공간의 질을 재창조하는 「21세기 커뮤니티 운동」임
- 70년대 새마을운동이 전국을 획일적으로 개발하고, 중앙 집권적인 기획에 의한 위로부터의 지역개발 방식인데 반해,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지역의 자율기획과 자기책임 원리에 의해 주민이 주도 하여 개성과 특성을 살린 아래로부터의 지역개발 전략임
- 3대 핵심사업
  - 대상지역의 마을공간을 종합적으로 재창조(H/W+S/W)
  - 대상지역의 교육·의료·복지·문화·환경·주택 등 6대 생활서비스 인프라 확충(H/W+S/W)
  - 지역공동체 복원 및 형성(휴먼웨어)

나. 추진절차

① 공모 사업계획서 작성・제출(시군→도→중앙)
② 공모사업 선정(행자부)
③ 기본계획 수립・제출(시군→도→중앙)
④ 기본계획 확정(행자부)
⑤ 과제별 사업추진(기초자치단체) : 4대과제
- 공간의 질 제고 : 마스터플랜 용역(행자부에 착수・중간 완료 보고 및 컨설팅 실시) ⇒ 실시설계 ⇒ 시공
- 3대과제(공간의 질 제고 제외) :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즉시 추진
※ 필요시 세부시행계획 수립 또는 용역 후 추진가능

다. 지원계획

○ '07~'09 국가지정시범지역 : 각종 사업 패키지 지원 및 별도 국비 인센티브 20억원 지원
○ 도지정 시범지역 : 도비 인센티브 6억원('07~'09, 매년2억원)

라. 대상지역 현황

'07~'09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사업 공모에서 우리 도는 행복마을 조성을 추진하여 다른 지역보다 한발 앞서 사업아이템을 준비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은 결과 지역주민의지, 사업계획내용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전국 30개소중 13개소(27.7%)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선정되었다.

○ 국가지정 시범사업 : 7개소
- 곡성(섬진강기차마을), 장흥(우산 Slow World), 강진(청자마을), 무안(하늘백련마을), 함평(나비연꽃마을), 완도(울모래마을), 진도(운림예술촌)

○ 도 지정 시범사업 : 6개소
- 광양(리버사이드 빌리지), 담양(전통음식고을 창평), 구례(산

수유마을), 보성(다향마을), 해남(땅끝마을), 장성(축령산 휴마을)

<표 2-367>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지역별 대상지역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47	1	2	6	2	4	7	13	8	3	1
국가지정	30	1	2	3	2	2	3	7	6	3	1
도 지정	17	-	0	3	0	2	4	6	2	-	-

마. 향후 추진계획

○ 실시설계 완료 시군부터 사업 본격 추진 : '08. 4월 ~ 12월
○ '07~'09년 시범사업 마무리 : ~'09.12월



행정지원국 행복마을과장 이승옥,
도시민유치담당 정형철, 담당자 정인화

3-2. 행복마을 조성

가. 추진배경

농촌인구의 감소로 빈집이 날로 늘어가는 추세에 있으며, 고령사회인 전남의 경우 상당수 노인들이 자연부락 단위로 흩어져 살고 있어 복지서비스 비용이 과다 소요되고 사람이 살고 있더라도 노후불량주택이 경관을 해치고 도시민이 방문을 꺼리는 실정이다.

- 전남 도내 빈집(08년 조사결과) : 12,911동(전체 농촌주택의 3.9%)
- 65세 이상 인구비율('05년말) : 15.6%(13개 군지역은 20% 초과)

따라서 전남도는 낙후되어 있는 농어촌마을을 사람이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어 주민들과 후손들이 정착하고 도시민들이 돌아오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 행복마을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다.

나. 추진방안

정주여건개선 및 주민소득증대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정주여건 개선은 한옥으로만 주택을 개량하고 상·하수도 설치, 주차장, 마을안길 확장 등 마을공공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소득증대사업은 한옥민박, 체험프로그램운영하고 지역특산품을 판매하여 지역의 소득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다. 지금까지 추진상황

민선 4기 도지사 취임과 더불어 행복마을조성사업을 도정주요시책사업으로 채택('06. 6월)하고 전국 최초로 행정혁신국내에 행복마을과('06.8.28)를 설치하여 전남도 주요 시책사업인 행복마을조성사업을 전담토록 하였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교수, 전문가등으로 「전략기획팀」을 가동하여 「기본계획시안」을 마련하고 2007. 3월 마스터프랜수립 용역에 착수 하여 6개월간의 용역을 거쳐 2007. 9월에 행복마을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

그리고 행복마을조성사업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들을 홍보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여건이 좋은 마을을 찾아가 사랑방식대화(07년중) 30여회 가졌으며, 국내·외 전문가 의견수렴, 아이템 발굴 및 행복마을 붐 조성을 위해 도지사, 목포대학교 총장, 한국농촌경제연구소장 등 주요인사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마을 조성 국제심포지엄(07.11.2)을 개최했다

또한 최초로 고흥 명천, 장흥 우산, 해남 매정, 무안 약실, 무안 복룡 등 선도 5개 마을을 행복마을로 지정('07. 12. 18)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마을별로 한옥 10동 이상을 '07년 중에 착공했다.

2008년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행복마을을 발굴하기 시작하여 상반

기('08. 4월)중에 신규단지 조성형 6개소를 행복마을로 지정하고, 이어서 하반기('08. 9월)에는 기존마을 정비형 13개소와 신규단지 조성형 5개소를 추가로 행복마을로 지정하여 08년 12월말 기준 기존마을 정비형 행복 마을 18개 마을과 신규단지 조성형 11개소 등 총 29개소의 행복마을 지정하여 174동분의 한옥신축에 필요한 한옥보조금 35억원을 지원했으며 마을별로 행복마을조성 계획 수립과 조감도 작성을 12월 이전에 완료하고 개별사업과 패키지로 지원된 사업을 착공하거나 실시계획을 수립해 왔다.

라. 향후 추진계획

지속적으로 행복마을 발굴해 나가는 한편 하반부터는 주민주도형 상향식 공모제를 통해 행복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며, 주민소득사업 증대를 위해 한옥민박, 체험프로그램운영, 특산품판매가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행복마을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고, 이러한 소득사업을 비롯한 행복마을조성사업을 민간 주도로 이끌어갈 주체인 행복마을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지원국 행복마을과장 이승옥,
한옥마을담당 방길현, 담당자 남두식

3-3. 주택건설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가. 주택건설

우리 도의 전체적인 주택보급률은 110%에 이르고 있으며, 정부의 중장기적인 주택가격 안정과 경제성장 및 고용창출 지원으로 주택의 질적 수준 향상을 추구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표 2-368> 주택보급률 추이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가 구(수)	531,200	667,962	758,147	692,287	661,821
주 택(수)	673,700	671,339	721,486	733,214	748,450
보급률(%)	126.8	100.5	99.12	105.91	113.08

앞으로 도민의 주거수요 변화에 부응하여 주택의 양적공급 확대와 질적수준 향상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무주택자에 대한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임대료가 저렴한 장기 임대주택건설로 영세민 등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2-369> 연도별 주택건설 실적

연 도 별	2004	2005	2006	2007	2008
호 수	16,668	8,369	9,038	11,662	15,669



행정지원국 행복마을과장 이승옥,
주택건축담당 김태형, 담당자 나승권

나. 주거환경 개선사업

(1)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불량 주거지의 정비사업 시행으로 공공기반시설 및 생활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복리 증진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저리의 국민주택자금을 융자하여 주택을 개량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 16개 시군 127개 지구에 5,311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

1단계 사업('01~'05)은 목포 등 5개시 지역을 대상으로 53지구에 2,194억원을 투자하여 05년까지 투자를 완료하였으며, 2004년에 확

정된 2단계('05~'12)사업은 군 지역을 포함 16개 시·군 74지구에 3,117 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07년까지 770억원을 투자하였고 '08년에는 397억원을 투자하여 도내 도심미관 향상과 정비구역내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농촌주택개량사업

1976년부터 2014년까지 총 1조 5,489억원의 개량자금을 농어민에게 저리로 융자하여 100,898동을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2007년부터는 주택개량시 한옥주택을 널리 권장하고 있다.

<표 2-370> 주거환경개선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8까지		2009계획		2010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주거환경개선	127지구	5,311	168지구 (43)지구	3,361	67지구 (65)지구	312	57지구 (57)지구	1,638
농어촌주택개량	100,898동	15,489	74,216동	10,738	1,391동	417	25,291동	4,334

※ ( )내는 연차사업에 따른 중복지구임

<표 2-371>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기준

구 분	지 원 기 준
주거환경개선	· 공공복지시설 : 어린이놀이터, 탁아소, 어린이집, 노인정 등 · 주택개량 : 주민자력개량(국민주택기금 융자) - 가구당 최고 4,000만원, 1년거치 19년상환, 연리 3%
농어촌주택개량	· 최고 4,000만원 융자(도비30%, 주택기금 등70%) - 5년거치 15년상환, 연리3%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자금 100㎡ 이하, 농촌주택정비자금150㎡이하



행정지원국 행복마을과장 이승옥,
주택건축담당 김태형, 담당자 최순철

3-4. 정주권·문화(전원)마을 조성

가. 추진계획

농촌의 면단위 중심마을 생활권 지역에 주택정비, 편익시설, 도로, 상·하수도 등을 집중지원하기 위해 19개 시군 95개 면에 면당 60억원을 투자하여 일반 정주권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쾌적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주거 또는 체류공간을 확충하여 농촌지역에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나. 추진성과

'90년부터 2008도까지 총 4,9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95개면을 대상으로 정주권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기반시설 등을 정비·확충하였으며,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전원마을 조성 사업을 대규모 단지조성에서 탈피하여 은퇴농장, 체재형 주말농원, 맞춤형 전원 주거단지 등의 수요자 취향에 맞춘 환경친화적 생태마을 조성 방식으로 개발방식을 전환하여 농촌주민은 물론 도시민 등의 농촌정주를 유도함으로써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주마을 조성>

<표 2-372> 정주권·문화(전원)마을 조성 추진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8년까지		2009년계획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5,689		5,230		459	
정주권개발	95면	5,261	95면	4,912	36면	349	
전원마을 조성	31마을	428	23마을	318	8마을	110	신규8 계속23



행정지원국 행복마을과장 이승옥,
농어촌개발담당 정근택, 담당자 김갑득

3-5. 오지개발사업

1990년부터 2008년도까지 도내 18개 시군 79개 오지면을 대상으로 4,643 억원을 투자하여 생활·생산기반시설 등 3개 분야에 2,988건의 오지개발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하여 오지지역의 소득증대 및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였다.

또한, 사업대상 및 위치 선정과 설계과정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유도하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통합감리 시행 및 명예감독관제 실시로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등 정부시책사업 목적을 달성하였다.

<표 2-373> 오지개발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건, 억원)

전 체 계 획		추 진 실 적						2009년	
		계		2007까지		2008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3,106	5,020	2,988	4,644	2,874	4,288	114	356	118	376

추진부서 행정지원국 행복마을과장 이승옥,
농어촌개발담당 정근택, 담당자 김갑득

3-6. 소도읍 육성사업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에 걸쳐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상향식 공모제」를 채택하여 개발 잠재력이 높은 읍 지역을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는 2009년까지 30개 대상 읍 중 16개 읍을 선정하였으며, 2004년까지 선정된 8개 읍은 2007년 사업을 완료하였다.

◇ 연도별 선정현황
- '03년 선정 : 화순읍, 장흥읍, 해남읍, 함평읍
- '04년 선정 : 남평읍, 구례읍, 무안읍, 완도읍
- '05년 선정 : 곡성읍, 벌교읍, 영암읍
- '06년 선정 : 담양읍
- '08년 선정 : 관산읍, 장성읍, 지도읍
- '09년 선정 : 진도읍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16개읍은 1읍당 국비 50억원과 도비 10.5억원('08년 이전 선정된 읍의 경우 국비 100억원)을 4년에 걸쳐 분할 지원 하게 되며, 16개읍 총사업비는 5,186억원으로 국비 1,393억원, 도비 168억원, 시군비 등 3,625억원이다.

2009년도에는 대상읍의 특성과 개발 잠재력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발콘텐츠(육성테마)를 설정하고 이의 구체적 실현 방법을 계획으로 수립하고 특히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전제로 한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표 2-374>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현황

(단위 : 억원)

전체계획		추 진 실 적						2009년 추진계획	
		계		2007까지		2008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30읍	8,000	12읍	3,322	12읍	4,121	7읍	296	8읍	823

※ '08년 7읍 중 4읍은 계속사업, 3읍은 신규사업, '09년 7읍은 계속사업이며 1읍은 신규사업임



행정지원국 행복마을과장 이승옥,
한옥마을담당 방길현, 담당자 정인권

4. 재난재해 관리

4-1. 재난관리 종합체계 구축

가. 지역 재난관리체제 확립

재난관리는 우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유사시 신속한 수습과 복구 및 긴급구조·구난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책임기관, 유관기관·단체간의 공조·협조체제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판단, 재난과 관련이 있는 38개기관·단체의 장으로 도 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도지사)를 구성('04. 1. 1)하여 1년에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시·군에서도 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시장·군수)를 구성하여 재난대비 체계를 확립하였다.

나. 재난의 효율적 관리

(1) 자연·인적재난 유형별 재난관리

자연·인적재난 사고수습·복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26개의 재난사고 유형별로 관련 부서를 한데 묶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편성하여 반별(상황총괄반, 행정지원반, 구조구급반, 비상지원반, 자원봉사지원반, 공보지원반)로 임무를 부여하여 부서별 역할을 다하도록 하였다. 또한 긴급 구조·구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긴급구조·구난에 필요한 인력장비를 갖춘 92개기관(소방관서 11, 경찰관서 25, 군부대 3, 의료기관 42, 공공기관 8, 지원기관 2, 행정기관 1)을 지정하고 임무를 부여하여 광역 지원협조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2) 국가기반재난 유형별 재난관리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산업, 보건·의료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효율

적인 예방대응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기반체계를 보존하고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7개 분야의 재난사고 유형별로 관련 부서를 한데 묶어, 예방, 대비, 대응,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편성하여 반별(상황총괄반, 행정지원반, 치안 및 구조구급반, 공보지원반)로 임무를 부여하여 부서별 역할을 다하도록 하였다.

자연·인적재난 유형별 담당부서

- 풍수해대책(방재과)
- 설해대책(방재과)
- 가뭄재난대책(방재과)
- 지진재난대책(방재과)
- 해일대책(방재과)
- 항공재난대책(도로교통과)
- 철도재난대책(도로교통과)
- 도로재난대책(도로교통과)
- 해상재난대책(해양항만과)
- 방사능방재대책(방재과)
- 다중이용업시설 안전관리대책(방호구조과)
- 전기·유류·가스 재난대책(과학기술과)
- 폭발·대형화재대책(방호구조과)
- 건축물 등 시설물 재난대책(행복마을과)
- 통신재난대책(정보통신담당관실)
- 독극물·환경오염 사고대책(환경정책과)
- 산업재난대책(투자정책관실)
- 공연·행사장 안전대책(문화예술과)
- 황사·폭염대책(방재과)
- 지하도상가 안전대책(방재과)
- 내수면 유·도선재난대책(방재과)

국가기반재난 유형별 담당부서

- 에너지(전력, 석유, 가스) - 과학기술과
- 정보통신(통신구) - 정보통신담당관실
- 교통수송(철도, 항공, 화물·대중교통, 도로, 항만) - 도로교통과, 해양항만과
- 산업(산업단지, 외국인산업단지, 주요생산업체) - 투자정책관실
- 의료보건(의료서비스, 전염병, 가축전염병) - 보건한방과, 축정과
- 건설환경(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매립시설) - 환경정책과
- 식·용수(식수, 용수) - 수질개선과, 농업기반정책과



건설방재국 방재과장 윤순홍,
재난안전담당 정남래, 담당자 김정선

4-2.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관리

가. 주요 위험시설물 지정, 관리 및 해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을 일제조사하여 총 3,437개소를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하고 이중 시설등급이 A, B, C급은 중점관리대상시설(3,425), D, E급은 재난위험시설(12)로 구분 지정하여 계절·시기별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점검 계획을 수립한 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불안전요인을 정비하고 있으며 특히 재난위험시설에 대하여는 월 1회 안전점검과 위험해소를 위한 장·단기계획을 수립하여 ('08년 5개소 36억, '09년 이후 12개소 186억)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나. 시설물 안전점검활동 지속 전개

재난사고는 예기치 못한 곳에서 발생하는 만큼 사전 대비를 위하여 건축·토목·전기·기계·화공·소방 등 전문기술직 공무원과 전기·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자문단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지적된 불안전시설은 안전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보수·정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시설물은 불안전 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적관리 하고 있으며, 2008년도 점검실적을 보면 7,897개소 시설을 점검하여 759개소 1,393건의 불안전 요인을 지적, 713개소 1,338건을 시정 완료하였고, 나머지 46개소 55건에 대하여는 정비중에 있다. ('96~'08년까지 : 87,535개소 점검, 11,873개소 21,494건 지적 안전조치 완료)



건설방재국 방재과장 윤순홍,
재난안전담당 정남래, 담당자 박병수

4-3.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전개

가. 「안전점검의 날」 행사

범도민 선진 안전의식 고취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생활 주변의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소 등을 미리 점검하는 한편 가정, 학교, 교통, 공공, 산업안전 분야별로 총 4,544개 기관 36,334명이 참여한 대대적인 캠페인 실시와 더불어 각종 홍보물 제작 배부 및 케이블TV 자막방송, 인터넷 게재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나. 시민안전봉사자 선정 위촉 운영

사회 전반에 만연된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고 온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이 보장된 사회조성을 위하여 범도민 안전문화운동의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민안전봉사자」를 선발하여 위촉하고, 또한 안전봉사자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과 일상생활에서의 안전에 대한 중요성 인식을 위하여 실제 상황과 접목한 재난안전 봉사활동 및 응급처치 요령 등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확산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시민안전봉사자 위촉현황

- ○ 위촉현황 : 총 3,648명(시・군별 100~455명)
- ○ 구성원 분포 : 국민운동단체 510, 시민단체 330, 통・반장 1,026, 유관기관・단체 763, 전문기술자・종사자 215, 기타 804

다. 「권역별 순회 재난안전교육 및 포럼」 실시

경북 상주시민운동장 압사사고, 고흥 거금도 연도교공사장 붕괴사고 등 안전 불감증에 의한 인적・물적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에 대한 노후 가스・전기시설 정비, 재난피해

에 따른 충격의 심리치료, 자활지원 등 행정의 힘이 미치지 못하였던 취약부분에 대한 맞춤형 안전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우리 도 주관으로 도로교통공단, 초당대학교 등 전문기관 강사 3명을 초빙하여 도내 공무원, 사업체 종사자, 도민 등 550명을 대상으로 연 2회 「권역별 순회 재난 안전교육 및 혁신포럼」을 실시하고 있다.



건설방재국 방재과장 윤순홍,
재난안전담당 정남래, 담당자 황재필

4-4. 예방위주의 방재행정 구현

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 운영

개발사업으로 인한 홍수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저감대책 등을 사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토목, 수자원, 도시계획, 환경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 를 운영하고 있다.

나. 재해대책 기금의 적립 및 운용

재해취약지구 사전정비와 대규모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매년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운용하고 있으며, 2008년까지 14,632백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다.

다. 지진방재 종합대책 수립

중국 쓰촨성 원천현('08. 05. 12) 지역에서 규모 8.0의 지진이 발생하여 공식 사망자가 6만9천여명에 이르는 등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추세

에 있어 자연재해대책법에 지진 방재에 관한 규정을 두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우리 도에서도 매년 지진방재 도상훈련과 규모 6.0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것을 가상한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지진재해 수습 체계 및 대응 능력을 향상시켰다.

라. 신속한 사전대비체계 구축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에게 실시간으로 재해상황을 전파하기 위한 자동우량경보시설, 재해 상황 문자전광판 등 22개 시군에 176백만원을 투입하여 재난 예·경보시설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198백만원을 투입 순천시 등 20개 시군의 노후 강우량기 20대를 교체하여 정확한 강우정보 확보를 통한 사전대비태세 강화 등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에 적극 노력하였다.

마. 광역지원시스템 구축 및 주민자율방재역량 강화

재난현장의 원활한 복구지원을 위해 도와 지역 군부대, 대한건설기계협회에 이어 부산, 경기도, 경남, 충남, 전북 등 5개 광역자치단체와 광주지방기상청 등 유관기관과 인력 및 응급복구장비 지원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실시간 현장정보 확보를 위해 경남, 제주도 현지주민과의 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을 위한 광역지원 체제를 마련하였으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해안가·계곡 등 43개 지구를 선정지구 내 재해약자 대피를 현지 주민이 책임지는 E-30(30분 대피)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역내 재해저감 시설에 대한 예찰과 응급복구 활동을 하게 되는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등 주민자율방재시스템을 강화하였다.



건설방재국 방재과장 윤순홍,
방재복구담당 김보환, 담당자 임광건

바. 재해 예방 · 복구기능 강화

(1) 추진성과

재해 발생 우려가 많았던 재해위험지구 146개소에 대한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998년부터 2008년까지 75지구에 2,849억원을 투입 52지구를 정비 완료하여 재해위험지구에서 해제하였으며, 나머지 94지구에 대하여는 2009년에는 31지구에 718억원을 투입하여 정비할 계획이며, 향후 5년간 4,211억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표 2-375> 재해위험지구 정비현황

(단위 : 억원)

총 개 소 수		2008까지 정비		2009 정비		2010이후 정비계획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지구수	사업비
146	7,778	75	2,849	31	718	40	4,211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하여 말목 및 포대류 등 수방자재 6종과 구호물자, 의약품 등 10종을 확보하여 시·군에 비축 중이며, 불도저 등 동원장비 2,402대를 지정, 관리함으로써 복구기능을 강화하였고, 재해발생으로 인한 이재민 발생시 이를 수용하기 위하여 학교, 교회 등 849개소를 이재민 수용시설로 지정하였다.

(2) 재해관련 시설에 대한 투자확대

국가관리 하천은 피해가 적은 반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하천은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홍수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미개수하천의 개수사업에 많은 재원을 투자해야 하며, 효율적인 개수를 위한 조사연구사업에도 투자를 늘려서 재해예방복구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건설방재국 방재과장 윤순홍,
방재복구담당 김보환, 담당자 남 건

4-5. 풍수해 피해 및 복구

가. 자연재해피해 발생 현황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49명(사망 45, 실종 4)이었으며, 재산피해는 14,636억원으로 공공시설피해 7,855억원, 사유시설피해 6,781억원 이었다.

<표 2-376> 최근 10년간 피해현황

구 분	피 해 액 (백만원)			인 명(명)		이재민 (명)	공공시설 (개소)
	계	사유재산	공공시설	사 망	실 종		
합 계	1,463,578	678,104	785,474	45	4	15,652	16,761
평 균	146,358	67,810	78,547	4.5	0.4	1,565	1,676
1999	126,513	81,511	45,002	8	-	3,177	1,771
2000	101,117	15,734	85,383	2	-	421	1,581
2001	6,619	5,598	1,021	1	-	43	51
2002	426,370	67,592	358,778	13	3	2,104	3,977
2003	272,404	175,192	97,212	10	1	4,558	3,843
2004	159,289	18,370	140,919	4	-	2,583	1,994
2005	250,321	245,500	4,821	4	-	2,436	142
2006	46,485	10,368	36,117	-	-	87	1,138
2007	73,442	57,221	16,221	3	-	243	2,264
2008	1,018	1,018	-	-	-	-	-

나. 신속한 재해복구 추진

(1) 이재민 구호

지난 10년간 발생한 이재민에 대해서는 사전에 비축되어 있는 구호 물자를 동원하여 신속한 응급구호를 실시하였고, 기 지정된 공동 수용시설이나 천막 등 임시 가건물에 질서 있게 수용하고, 취사도구와 유류 등을 지급하였다.

(2) 응급복구 실시

재해발생 시에는 기 편성된 수방단 및 민방위대원들이 보관중인

수방자재와 지정된 장비를 동원 신속한 복구를 통해 주민생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였으며, 특히 2007. 9월 호우 및 태풍 나리 피해 발생시에는 186천명의 복구인력과 2,839대의 복구 장비 동원, 복구비 국고 지원 확대, 복구단가 인상지원은 물론 재난지원금 선지급 등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조기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였다.

(3) 항구적인 개선복구 추진

재해복구는 자주방재 정신에 입각한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관·군의 협조로 복구조치하고 중앙지원에서 제외된 피해에 대하여도 소관부처, 지방자치단체 또는 복구 책임자가 자체복구계획을 수립하여 항구적인 개선복구 계획을 수립하였다.

<표 2-377> 최근 10년간 복구비 지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피해액	복구비 지원						
		계	중앙			지방비	융 자	자부담
			계	국 고	의연금			
합 계	1,469,578	2,489,100	1,554,355	1,540,628	13,727	412,026	397,431	125,288
평 균	146,958	248,910	155,436	154,063	1,373	41,203	39,743	12,529
1999	126,513	233,904	97,396	92,661	4,735	34,290	73,508	28,710
2000	101,117	287,094	214,836	213,429	1,407	49,160	17,010	6,088
2001	6,619	15,614	7,078	6,816	262	2,741	4,147	1,648
2002	426,370	800,985	596,945	591,385	5,560	141,685	56,943	5,412
2003	272,404	352,544	230,464	228,731	1,733	51,255	64,613	6,212
2004	159,289	218,540	159,733	159,733		37,616	14,680	6,511
2005	256,321	331,277	104,234	104,204	30	27,375	166,530	33,138
2006	46,485	84,281	37,325	37,325	-	29,316	-	17,640
2007	73,442	164,861	106,344	106,344	-	38,588	-	19,929
2008	1,018	-	-	-	-	-	-	-

라. 추진 성과

최근 10년간 호우, 폭풍, 해수범람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연평균 인명 피해 5명, 재산피해 1,464억원이 발생하였으며, 2008년에는

3회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으나, 도·시·군 재해대책본부와 유관기관에서 총체적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행정에 주력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건설방재국 방재과장 윤순홍,
방재복구담당 김보환, 담당자 임광건

4-6. 친환경적인 하천정비

하천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국가하천과 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으로 구분되며 하천연장은 총 3,232.1㎞로 국가하천이 328㎞, 지방하천이 2,904.1㎞이다.

<표 2-378> 하 천 현 황

구 분	하천연장 (㎞)	요개수연장 (㎞)	2008까지 개수		장 래 (㎞)	관리주체
			㎞	%		
계	3,232.1	3,590.0	2,794.5	77.8	795.6	
국 가 하 천	328	366.5	363.9	99.3	2.6	국토해양부
지 방 하 천	2,904.1	3,223.5	2,430.6	75.4	793.0	도 지 사

하천정비는 요개수연장 3,590.0㎞중 지금까지 2,794.5㎞를 정비하여 77.8%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하천은 요개수연장 366.5㎞중 363.9㎞(99.3%), 지방하천은 3,223.5㎞중 2,430.6㎞(75.4%)를 개수하였다.

하천개수는 자연친화적인 식생매트, 환경블록공법 등을 도입하여 친환경적으로 정비하고 천변호수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레저·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고, 수해 상습지역을 해소하여 하천변의 농경지와 가옥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갈수기 인근 농경지에 원활한 용수공급으로 가뭄해소와 주민 숙원사업 해결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건설방재국 방재과장 윤순홍,
하천담당 장정기, 담당자 정석규

4-7. 「도민 안전점검청구제」 추진

가. 필요성 및 목적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불안전시설을 발견하고 안전점검을 청구하면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불안전 시설을 무상점검 한 후 보수방법 및 해소방안을 제공하는 등 찾아가는 재난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 신청방법 및 점검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건축물, 옹벽, 민간·공공시설 중 위험요인이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단 공사와 관련된 법적분쟁시설, 민원이 발생된 시설은 제외하며 신청방법은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양식 및 인터넷, 전화로 청구하면 해당 시·군에서 우리도로 청구하게 된다.

도에서는 건축, 토목, 등 각 분야별 도 안전관리자문단과 도 방재과에서 확보하고 있는 철근 탐지기 등 안전점검 장비 13종을 활용하여 점검한다.

다. 추진 실적

2007년 여수시 남면 마을회관 등 46건, 2008년도 32건의 무료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정도, 보수방법 등 해소방안 제공하였고 또한 점검한 시설에 대해여는 해소 시까지 추적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건설방재국 방재과장 윤순홍,
재난안전담당 정남래, 담당자 김태곤

5. 토지정보의 고도화를 통한 토지의 가치 창출

5-1. 개별공시지가의 합리적 조사 및 공개

지가공시제도는 토지의 공적인 가격을 조사 공시함으로써 각종 토지정책에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거래 시 건전한 가격형성의 기초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토지에 관한 과세 및 부담금 부과 등에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과거의 지가체계는 국토해양부의 기준지가,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 표준액, 국세청의 기준시가, 재정경제부의 감정시가 등 소관주체별로 각기 다른 기준에 의해 평가하는 다원화된 지가체계였다. 그 결과 조사 인력 및 재정의 낭비는 물론, 상호 연계성이 결여된 결과 혼란과 불신이 초래되었고 이로 인하여 효율적인 부동산 정책의 수행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다원화된 공적지가 체계를 공시지가로 일원화하고 공적 지가에 대한 혼란,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며 나아가 토지 공개념 제도의 합리적인 시행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89. 4.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같은 해 7. 1부터 보다 체계화된 공시지가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필지별로 토지특성을 조사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이렇게 산정한 지가는 토지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며, 다시 또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404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였다. 이는 비과세 토지 및 공공용지를 제외한 도 전체토지의 72%에 해당한다. 또 구조적으로 양면성을 띠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가격수준에 공

정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직무연찬을 통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2008. 11. 7. 워크숍 개최, 토지특성 사전 열람제 운영, 위성영상을 활용한 체계적인 지가조사 등 전라남도만의 창의적인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하였다. 특히 2008년도 지가조사 국비예산을 전국에서 가장 많은 20억원을 지원받아 지가행정 추진체계를 확고하게 다졌다.



건설방재국 토지관리과장 이기환,
토지관리담당 윤영진, 담당자 김옥남

5-2.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리

2012여수세계박람회, 기업도시, 특성화산단 등 대규모 국·도정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사전 예방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토지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투기우려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토지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심사시 토지의 개발·이용계획의 적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수요자 거래인 경우에는 신속하게 허가처리 하되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분 조치하여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는 한편 토지의 위장 증여·전매와 같은 불법적 거래를 금지하는 등 토지거래 허가제 운영에 내실을 기한다.

또한, 전남경제 활성화에 부응코자 토지시장 상황에 따라 허가구역을 해제(또는 축소) 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일정규모 미만의 소규모 토지거래는 허가절차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수요자 위주의 토지거래 활성화와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표 2-379>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

지역		허가대상 면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180㎡를 초과하는 토지
	상업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는 토지
	공업지역	660㎡를 초과하는 토지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90㎡를 초과하는 토지
도시지역외의 지역	농 지	500㎡를 초과하는 토지
	임 야	1,000㎡를 초과하는 토지
	농지 및 임야이외의 토지	250㎡를 초과하는 토지

<표 2-380> 전라남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현황

(2008. 12. 31현재)

지 역		면적(㎢)	지정기간	지정사유	비고(지정자)
합 계		2,105.3	도 전체면적(12,212)의 17.2%	16개 시군	
여수시	화양면 장수·이목·서촌·화동·안포리 중 경제자유구역안의 지역(5개리)	9.8	'08. 12. 11~'09. 12. 10(1년)	광양만권 화양지구 개발	광양경제청장
여수시	수정·공화·덕충동(3개동)	3.6	'04. 11. 10~'09. 11. 09(5년)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도지사
여수시	오천동(1개동)	5.5	'07. 06. 10~'09. 06. 09(2년)	해양경찰학교 이전사업	도지사
여수시	경호동(1개동)	3.1	'07. 09. 25~'12. 09. 24(5년)	경도종합개발사업	도지사
순천시	해룡면 신대·성산·선월리 중 경제자유구역안의 지역(3개리)	6.7	'08. 04. 01~'11. 03. 31(3년)	광양만권 신대배후단지 조성	광양경제청장
나주시	남평읍, 금천·산포·다도·봉황면, 관정·평산동(7개읍면동)	222.1	'05. 11. 08~'10. 11. 07(5년)	공동혁신도시 건설	도지사
나주시	동수동, 왕곡면 덕산·양산·장산리(1개동, 3개리)	10.0	'08. 04. 09~'10. 04. 08(2년)	미래일반산업단지 조성	도지사
나주시	개발제한구역(남평읍, 노안·금천·산포면 일부)	39.6	'08. 05. 31~'09. 05. 30(1년)	개발제한구역 투기방지	국토부장관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1개리)	7.4	'05. 09. 10~'10. 09. 09(5년)	광양복합물류단지 개발	광양경제청장

지 역		면적(㎢)	지 정 기 간	지 정 사 유	비 고 (지정자)
담양군	담양읍 가산리, 수북면 주평·두정리(3개리)	5.4	'08. 09. 01~'11. 08. 31(3년)	담양일반산업단지 조성	도지사
곡성군	곡성읍 신기·학정·장선·읍내리(4개리)	19.6	'08. 11. 10~'11. 11. 09(3년)	곡성일반산업단지 조성	도지사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금산면 석정·신평리(3개리)	38.5	'08. 06. 18~'10. 06. 17(2년)	고흥조선타운 개발	도지사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1개리)	4.8	'08. 06. 18~'10. 06. 17(2년)	남열리조트 개발	도지사
보성군	벌교읍 마동리(1개리)	8.7	'08. 11. 10~'11. 11. 09(3년)	보성일반산업단지 조성	도지사
장흥군	장흥읍 해당·삼산·금산·상·관덕·향양·축내리(7개리)	14.0	'08. 01. 23~'11. 01. 22(3년)	해당일반산업단지 조성	도지사
장흥군	회진면 덕산·대리(2개리)	5.1	'08. 11. 25~'11. 11. 24(3년)	회진일반산업단지 조성	도지사
강진군	강진읍 송덕리, 성전면 명산·수양·성전·도림·금당·송학리(7개리)	26.3	'08. 06. 18~'11. 06. 17(3년)	강진일반산업단지 조성	도지사
해남군	산이면, 화원면 청용·금평·영호·성산리(2개읍면)	62.0	'04. 08. 21~'09. 08. 20(5년)	관광레저도시 건설	도지사
해남군	해남읍, 계곡·마산·황산·문내·화산·화원면(7개읍면)	457.6	'05. 03. 26~'09. 08. 20(4년)	관광레저도시 건설	국토부 장 관
영암군	삼호읍, 미암·서호·학산면(4개읍면)	189.7	'05. 03. 26~'09. 08. 20(4년)	관광레저도시 건설	국토부 장 관
무안군	무안읍, 청계·망운·운남·현경면(5개읍면)	207.1	'05. 03. 26~'09. 08. 20(4년)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건설	국토부 장 관
무안군	해제면(1개면)	63.9	'05. 07. 02~'09. 08. 20(4년)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건설	국토부 장 관
함평군	월야면 용월·양정·영월·외치·월야·월악리, 나산면 이문·수상·용두리(9개리)	30.0	'08. 06. 18~'11. 06. 17(3년)	공동국가산업단지 조성	도지사
영광군	대마면 송죽·남산리(2개리)	10.8	'08. 09. 01~'11. 08. 31(3년)	영광일반산업단지 조성	도지사
신안군	압해면(11개리) ※고이·매화리 제외	52.4	'08. 10. 27~'13. 10. 26(5년)	신안조선타운 건설 등	도지사
신안군	지도읍, 증도·임자·자은·비금·도초·흑산·하의·신의·장산·안좌·팔금·암태·압해면 (14개읍면)	601.6	'05. 07. 02~'09. 08. 20(4년)	다이아몬드제도 개발 투자	국토부 장 관



건설방재국 토지관리과장 이기환,
토지관리 담당 윤영진, 담당자 조성규

5-3 부동산개발업 등록 관리

부동산개발업이란 토지를 택지·공장용지·상업용지 등으로 조성하거나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해당 부동산을 일반에게 판매·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업종이다.

그동안 건설업자,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만 있었을 뿐, 부동산개발로 인한 관리제도가 없음으로 인해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개발업자가 난립하여 무질서한 부동산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건전한 부동산시장의 육성 및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 11. 18부터 시행되었다.

<표 2-381> 등록대상 규모

건 축 물(연면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	토지(면적)
연면적2천㎡ (연간5천㎡)이상	2천㎡(연간 5천㎡)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이상인 경우	3천㎡ (연간1만㎡)이상

<표 2-382> 등록요건

구 분		등 록 요 건
자본금	법인	자본금 5억원 이상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전문인력		상근 2명 이상
시설		사무실 전용면적 33㎡ 이상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는 등록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 첨부하여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에 제출하면 임원에 대한 신원조회와 사무실 적격여부 확인을 거쳐 30이내 등록증을 교부하고 있다.

<표 2-383> 전라남도 부동산개발업 등록 현황(2008.12월말 현재)

구 분	합 계	신규	폐업	비 고
업체수	26	27	1	



건설방재국 토지관리과장 이기환,
토지관리담당 윤영진, 담당자 최경주

5-4. 정확한 토지등록 관리

지적(地籍)이란 국가기관이 국토의 전체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등록 공시하고 변동 사항을 연속적으로 등록 관리하는 국가의 제도를 말하며,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권리관계 등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법정의 형식을 갖추어 국가기관에서 비치하고 있는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만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념이다.

이러한 지적의 정확한 등록관리를 위해서 도내에 설치한 지적측량 기준점 47,348점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6,418점을 신설하였으나, 이중 5,000점을 도내 마을단위마다 1내지 2점을 설치함으로써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와 관련 구획정리, 경지정리 등의 사업에 의한 확정측량 24개 지구 3,333ha를 정확히 확인하여 기간 내 등록하였으며 종전에는 토지의 경계를 수작업에 의하여 등록공시 하였으나 현재는 수치화된 경계를 좌표에 의거 등록하고 있다.

또한 도민들로부터 신청된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161천 필지를 정확히 등록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127천필에 대하여 등기를 대

신 처리해 줌으로써 5,080백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여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특히, 전라남도에서는 2008년을 투자유치 원년의 해로 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에 투자유치할 기업에 대해 부동산 관련 수수료를 10~50%까지 감면지원해 줄 수 있도록 2008. 12. 17 GS칼텍스(주) 여수공장 장구미사택 영빈관에서 전라남도지사와 토지관련 5개 유관단체장(한국공인중개사 전라남도지부, 대한건축사협회 전라남도건축사회, 광주지방법무사회, 대한측량협회 광주전남지부, 한국감정평가협회 광주전남지회)간 협약체결을 추진하였다.



건설방재국 토지관리과장 이기환,
지적담당 박종석, 담당자 유영수

5-5. 지적 종합정보센터 운영

토지관련 정보의 공동 활용으로 토지정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토지정보 수요기관의 각종 토지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적, 주민자료, 공시지가자료 등을 연계 통합하여 적기에 제공하고 주민편의 위주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토지정보센터는 '94년 행정자치부에서 설치 운영되었으며 도는 '96년 조상 땅 찾아주기 민원서비스를 제공을 시작으로 2001년 11월 시·군 까지 온라인 개통하였다.

도내 토지정보 12,212㎢ 5,604천 필지에 대한 정보를 완벽하게 관리 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각종 토지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이동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이 발생된 토지변동자료나 소유권이전, 보존등기 등으로 발생한 소유권변동 자료 등 총 801천여 필지의 변동자료를 실시간으로 정리하여 최신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08년 한해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자 46,317명에 대한 토지정보를

검색하여 57,888필지를 제공함은 물론, 생계유지사유로 인한 병역감면 대상자, 각종세금 체납자, 벌과금 부과자 등 개인이나 법인의 재산 소유현황 자료 93,356명의 자료를 검색하여 773,454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조상 땅을 찾아주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3,394명이 신청하여 15,294필지의 땅을 찾아 줌으로써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며, 2002년 2월 1일부터는 시·군에서도 조상 땅 찾아주기를 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확대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이 가까운 시·군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에 거쳐 115천장의 지적(임야)도 DB구축사업을 완료한 후 현재 전산 민원발급 처리 중에 있으며, 특히 2008년부터는 분할측량 등 측량민원으로 인한 지적측량결과도 3,332장을 DB구축하여 향후 사전 민원예방 및 도민 재산권보호에 크게 이바지 할 것입니다.



건설방재국 토지관리과장 이기환,
지적담당 박종석, 담당자 김영신

5-6. 측량업 등록 관리

측량업이라 함은 기본측량, 공공측량 또는 일반측량의 용역을 도급받는 영업을 말하며, 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측량업 시행령에서 정하는 종류별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측량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2004년 7월 21일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10개 측량업종 중 측지측량업, 연안조사측량업, 항공측량업, 공간영상도화업, 영상처리업, 수치지도제작업, 지하시설물측량업은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공공측량업 및 일반측량업은 시·도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다.

공공측량업의 업무의 범위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각종 건설공사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계획, 조사, 설계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공공측량과 일반측량으로서 토지에 대한 측량과 설계에 수반되는 조사측량, 측량관련도면의 작성 등을 위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하며, 일반측량의 범위는 공공측량의 설계금액이 3천만원이하의 공사와 일반측량으로서 토지에 대한 측량을 말한다. 전남도내 측량업등록은 총 133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표 2-384> 전라남도 측량업 등록 현황

구 분	합 계	공공측량업	일반측량업	비 고
업체수	126	41	85	

측량업의 등록절차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접수하면 측량기술자의 이중등록여부, 장비의 등록기준 적합여부, 임원 및 기술자의 신원조회 등을 실시하여 관계법령에 위법성이 없을 경우에는 접수한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등록이 가능하다.



건설방재국 토지관리과장 이기환,
지적담당 박종석, 담당자 김진형

5-7.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고도화 및 대국민 서비스 강화

토지행정의 효율화 및 합리적인 토지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축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을 용도지역지구 데이터베이스의 신속성 및 연계성을 향상시키고 대국민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연차적으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으로는 용도지역지구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제도정비가 필요하고 토지관리 행정업무 지원에 필요한 최신성 도

시계획DB 요구가 증대되고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광범위한 분야에서 실시간 기본 지리정보 수요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고도화추진 내용으로는 최신의 토지정보로 정비하여 국가 토지행정 업무를 신속하고 안정성 있게 처리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토지행정 업무 및 공간산업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민원서비스 체계구축이다.

이는 공간정보산업의 활성화를 꾀하고 국가정책목표에 부응하여 한 차원 높은 토지정책지원 및 대국민 서비스를 할 수 있다.

한편 국가에서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기반 시스템과 연계한 온나라 부동산 포털을 이용하여 개별필지의 공시가격, 아파트 실거래가 등 가격정보와 용도지역지구 등 토지이용규제정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열람 등의 각종 토지와 관련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건설방재국 토지관리과장 이기환,
지리정보담당 김재연, 담당자 조치영

5-8. 새 주소 사업

현행 주소체계는 일제강점기부터 부여된 토지 지번을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그동안 각종 개발과 도시팽창 및 토지분할·합병 등으로 지번이 불규칙하게 나열됨으로써 우편배달, 방문 등 국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또한 물류비용 증가와 범죄·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진국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 중심의 “새로운 주소변경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그 근거법률인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이 2007. 4. 5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든 도로에는 도로명을 붙이고 모든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새 주소 사업을 착수하였다.

우리 도의 새 주소사업 업무량은 도로구간 16천개소, 건물수 563천동, 세대별 새주소 확정 고지 1,562천건이며, 2009까지는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 모든 시설물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군별 사업추진사항을 살펴보면 2001년도에 목포, 광양시에 이어서 2002년도에는 여수, 순천, 나주시 지역을 중심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4년부터는 담양, 영암, 영광군 등 군지역을 시작으로 2005년도에는 무안, 함평, 장성군이 추진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고흥, 화순, 해남, 진도군까지 확대 시행하고 2007년도에는 나머지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완도, 신안군이 사업을 착수하였다.

시설물 설치 외에도 할 일은 많다. 각종 계약이나 거래 등 법률관계 설정에도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민등록이나 인감 등 355종에 이르는 방대한 공적장부의 표기도 바꿔야 한다.

또 일시에 새 주소로 전환할 경우 불편과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1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현재의 지번주소와 새 주소를 함께 사용토록 하고, 모든 공적장부 정리가 마무리 되는 2012년부터는 새 주소인 도로명주소만 사용할 계획이다.

특히 2012년 새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포스터나 팸플릿, 홍보영상물을 통해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중앙부처와 공동으로 전국단위 공중파 방송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새주소 안내지도도 대량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초등학교 3,4학년 지역사회교과서에 새주소 사용 생활화 내용을 싣는 한편, 각 세대별로 통장과 이장을 통해 자신의 새 주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자세히 알릴 계획이다.

새로운 주소체계로 전환 과정에서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었지만, 새 주소가 정착되면 위치탐색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약될 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구조구급 등 각종 응급서비스가 대폭 향상되고 물류

비용 절감과 위치정보서비스가 획기적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새주소 사업은 단순히 지번주소의 문제점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위치정보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주민생활양식에 일대 혁신을 가져오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건설방재국 토지관리과장 이기환,
지리정보담당 김재연, 담당자 박석호

5-9. 공간정보화사업

지표면과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적 인공적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수요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도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각종 도정시책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공간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요추진사항을 보면 2004. 5. 18일 GIS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지리정보담당을 설치하고 2005. 12월 "전라남도 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매년 중앙부처와 타 시도 및 국토지리정보원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2007년에는 국토해양부와 협약을 체결한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일명 KOPSS) 사업을 추진하는 등 신규사업발굴에 노력하였다. 또한 지리정보공동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각 대학의 관련학과 교수 및 중앙부처,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협의회를 통해 보다 완벽한 공간 정보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언과 자문을 받았다.

첨단 공간정보기술에 관한 학술발표와 정보교류를 통해 도내 공간정보화사업에 활로를 모색하기 위하여 2004년과 2005년에는 「전라남도 GIS 컨퍼런스」를 실시하였고, 2006년부터는 매년 9월 15일

을 "지리정보의 날"로 지정「제1회 전라남도 지리정보의 날」행사를 시작으로, 2007. 9. 14「제2회 전라남도 지리정보의 날 (풍요로운 전남건설과 GIS 꿈)」, 2008. 10. 15「제3회 전라남도 지리정보의 날 (GIS와 함께하는 투자의 땅 전남)」을 개최하였다. 특히 올해에는 전국 최초로 우리도가 자체 개발한 투자유치지원시스템을 참석자에게 선보였으며, 본 시스템은 투자예정지에 대한 각종 고시사항, 환경규제 사항 등을 파악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성영상을 활용한 3차원의 시뮬레이션 기능을 활용하여 투자자에게 보다 더 구체적이며 현실감 있는 정보를 제공 할 수 있어 도정의 운명을 내걸고 추진하고 있는 투자유치가 일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해 본다. 앞으로도 전라남도 지리정보의 날 행사 등을 통해 GIS 공감대 형성과 산·학·관 및 민간기업체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계기를 만들어 갈 것이다.

최근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 분류되는 F1국제 자동차 경주대회 경주장을 영암군 삼호읍 일원에 건설중이며,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과 대불산단, 그리고 서남해안 일대가 투자의 적지로 떠오르는 등 전남의 성장잠재력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의 아름다운 영상을 활용한 위성영상지리정보시스템 구축 (2004. 12월 ~ 2006. 8월) 완료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추진에 기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행정내부뿐만 아니라 남도의 현장감 있는 천혜의 영상을 전국에 알리고자 위성영상 참여마당 시스템 (2006년)을 구축, 대국민 서비스를 실시하여 하루평균 2,000~2,500명의 주민들이 찾는 인기시스템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와 같이 GIS를 기반으로 구축한 각종 시스템은 대규모 개발 입후보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등 효과적인 정책자료로 활용 가능하고, 간척지 또는 해변가의 미등록 토지를 발굴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고, 관광지 접근경로의 3차원 입체검색과 기타 도로, 산림, 재난재해 위기관리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획기적

이고 다양한 분야로 발전이 가능하다. 특히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먼 거리에 있는 전남지역에서는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시키는 데에도 커다란 효과가 기대된다.



건설방재국 토지관리과장 이기환,
지리정보담당 김재연, 담당자 박원선

5-10. 도로와 지하시설물 정보화사업

정부에서는 1994. 12월과 1995. 4월 연이어 발생한 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도로와 지하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하시설물 등 자료를 통합 관리하기로 하여 축척1000분의 1 수치지도가 제작된 시지역의 도시계획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우리 도에서는 1997년 여수시에서 시범적으로 도로, 상수도와 하수도 시설물을 현장조사·탐사하여 위치 및 속성 정보를 수치화 하였고, 현재는 시지역까지 확대하여 목포시를 비롯한 5개시에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08년까지 총 사업량 6,457km를 입력 완료하였다.

사업 완료로 도로상의 시설물,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 및 관련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하공간 개발시 가스관 폭발과 같은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재해발생시 주변지역의 상수도·통신·전기·가스 등 위험시설물의 현황을 즉시 파악하여 조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료의 공동활용에 따른 난개발로 인한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건설방재국 토지관리과장 이기환,
지리정보담당 김재연, 담당자 고황석

6. 영산강 살리기 추진

6-1. 영산강 기본현황

우리나라 5대강인 영산강은 담양군 용면의 추월산 자락인 가막골 "용소"에서 발원하여 호남평야와 나주평야 등의 드넓은 들판을 아우르며 목포시 영산강 하구 둑을 통해 남해안으로 흘러나간다.

영산강 유역의 평균경사는 19.5%로 비교적 완만한 유역이고, 하천에 인접하여 농경지가 발달해 있으며, 영산강의 중상류부에는 광주광역시와 나주시 등의 도심지 및 인구밀집지역이 위치하고 있고, 전체 유역면적 3,455㎢중 임야와 농경지가 각각 1,749㎢와 1,161㎢로 전체 유역면적의 51%, 34%, 도시지역이 242㎢로 7%를 차지, 임야와 농경지가 전체의 85%를 점유하고 있다.

영산강 유역의 국가하천은 영산강 등 5개 하천 191.3㎞이며, 지방1급 하천은 황룡강 등 2개 하천에 46.2㎞, 지방2급 하천은 금성천, 용천 등 163개 하천에 1,239㎞이다.

영산강 유역의 행정구역은 전라북도 정읍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목포시,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화순군, 함평군, 무안군, 영암군 등 1개 광역시, 2개 도, 3개시, 7개군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 유역면적(3,455㎢) 중 각 행정구역의 유역 내 점유비율은 나주시가 17.5% (603.8㎢), 장성군 15.0% (518.7㎢), 그리고 광주광역시가 14.5%(501.3㎢)로 가장 큰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유역내 인구는 총 2,257,019명으로 남자가 1,122,048명, 여자가 1,134,971명으로 여자가 12,923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745,825가구(가구당 약 3명)에 거주하고 있다.

영산강 유역 기본현황

○ **위　　치** : 한반도 남서부 전라남 · 북도
(동경 126° 26′ 12″~127° 06′ 07″, 북위 34° 40′ 16″~35° 29′ 01″)

○ **시 · 종점** : 담양군 용면 가막골(용소) ~ 목포시 옥암동(영산강 하구둑)

○ **유로연장** : 129.5㎞
- 동서간 최대길이 : 60.6㎞　- 남북간 최대길이 : 89.9㎞
- 유역의 평균 폭 : 26.7㎞　- 유역형태 : 직사각형(수지상 하천)

○ **유로면적** : 3,455㎢
- 전라북도 정읍 4.4㎢ - 광주광역시 501.3㎢
- 전라남도 나주 603.8㎢, 목포 3.1㎢, 담양 412.0㎢, 장성 518.7㎢, 영광 2.5㎢, 화순 471.6㎢, 함평 326.2㎢, 무안 166.3㎢, 영암 445.1㎢

○ **유역내 하천현황**
- 국가하천 : 5개 하천 191.3㎞(영산강 11.7㎞, 황룡강 9.4㎞, 지석천 34.0㎞, 고막원천 22.3㎞, 함평천 13.9㎞)
- 지방1급 하천 : 2개 하천 46.2㎞(광주천 11.8㎞, 황룡강 34.4㎞)
- 지방2급 하천 : 163개 하천 1,239㎞

○ **유역내 토지이용** : 전체면적 3,455㎢
- 산림 1,749㎢(50.6%), 농업 1,161㎢(33.6%), 초지 63.7㎢(1.8%), 시가화/건조지 242.2㎢(7.0%), 수역 208.8㎢(6.0%), 나지 30.5㎢(0.9%)

○ **유역내 인구** : 2,257천명(남 1,122천명, 여 1,135천명)
- 전라북도(정읍) : 153천명(남 75천명, 여 78천명)
- 광주광역시 : 1,387천명(남 689천명, 여 698천명)
- 전라남도 : 717천명(남 358천명, 여 359천명)
  나주 106천명(남 53천명, 여 53천명), 목포 246천명(남 122천명, 여 124천명), 담양 54천명(남 27천명, 여 26천명), 장성 55천명(남 28천명, 여 27천명), 화순 79천명(남 40천명, 여 40천명), 함평 44천명(남 22천명, 여 22천명), 무안 69천명(남 35천명, 여 34천명), 영암 65천명(남 32천명, 여 32천명)

※ 자료 : 영산강유역종합치수계획 보고서(2007, 익산지방국토관리청)

6-2. 영산강 살리기 추진개요

옛 청동기 시대부터 마한~조선에 이르기까지 2000년이 넘는 동안 우리 선조의 삶의 터전이며 세금·곡물 등의 운송로이며 문물교류의 현장이었던 영산강이 그 동안 침전물과 각종 폐수 등으로 인하여 수질이 많이 오염되었다.

또한, 좁은 단면과 쌓인 퇴적토 등으로 하천이 범람하여 생명과 재산피해가 자주 발생되었다.

※ 대규모 풍수피해 현황

- 1989년 집중호우로 주택 1,496동 침수 및 이재민 5,961명 발생
- 2002년 태풍 루사로 사망 및 실종 246명, 이재민 63,085명 발생
- 2004년 태풍 메기로 인한 만봉천 범람으로 많은 이재민 3,500명 발생

6-3. 그 동안의 추진상황

2004년 7월 수질개선 및 재해예방 차원의 '영산강 뱃길복원'을 본격 착수하여, 2006년 6월 "영산강 프로젝트 TF팀"을 구성하고 같은 해 7월 광주광역시와 공동으로 「광주·전남 영산강 수질개선 노력 합의문」을 발표하게 되었다.

2007년부터 "영산강 프로젝트 기본구상안" 검토에 착수하여 같은 해 12월에 재해예방 및 수질개선 사업 외에 친수공간 조성, 역사·문화 복원 등을 포함한 영산강 살리기 종합계획을 마련하였다

2008년 1월 영산강 살리기 구상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해 6월 중앙부처에 영산강 살리기 사업 조기 추진을 건의하는 등 영산강 살리기 사업계획의 반영에 노력하였다.

2008년 12월 15일 정부에서 녹색뉴딜사업의 일환으로 '4대강 살

리기 사업'을 발표하고, 영산강 살리기에 10개 사업, 1조 5,530억원을 반영하기로 하였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 반영계획

○ 사업기간 : 2009~2015년(7년간)

○ 사 업 비 : 10개 사업, 1조 5,530억원

○ 반영내역

- 수질개선 사업 : 4,117억원(영산강배수문 증설 등)
- 치수대책 사업 : 7,293억원(하도정비, 저류지 조성 등)
- 문화·관광, 친수공간 조성 : 4,120억원(영산강 강변도로 개설 등)

6-4. 앞으로의 계획

전남도는 국가 중장기 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조기에 완료토록 하고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영산강 살리기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영산강 살리기 사업이 도민의 공감대와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여러 홍보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건설방재국 영산강사업지원단 최태근,
기획홍보담당 최병만, 담당자 이종연

7. 공동혁신도시 건설

7-1. 이전공공기관 실무협의회 운영

가. 실무협의회 구성

공동혁신도시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8개 이전기관의 실무팀장급 및 광주·전남 지원단, 나주시, 한국토지공사 관계자 등 21명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실무협의회를 통해 이전기관의 애로 및 건의사항 수렴, 당면 현안사항을 논의하는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나. 운영상황

이전추진 실무협의회는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건설함에 따라 윤번제로 회의를 주관하고 있으며 이전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광주와 전남, 서울에서 순환 개최하여 오고 있다. '06. 3월에 최초로 이전추진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11차에 걸쳐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실무협의회에서는 기본구상 용역 추진상황, 지역탐방프로그램 운영, 개발 및 실시계획 착수상황 등에 대해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전기관이 요구한 '혁신도시 중심부에 이전기관 배치'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건의하여 개발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이전기관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해 오고 있다.

다. 앞으로 추진계획

이전추진 실무협의회는 공공기관이 공동혁신도시로 이전이 완료되는 2012년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이전추진 실무협의회에서는 이전기관과의 이행실시협약 체결 및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대책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하여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이전기관 직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단장 나도팔,
이전지원담당 이영만, 담당자 강희상

7-2. 혁신도시 공사발주 및 착공

가. 공사발주

참여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중 하나인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건설은 입지선정에서 보상까지 숱한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2007년 11월 8일 나주시 금천면 일원 혁신도시 조성 현장에서 첫 삽을 뜨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1-1공구) 조성공사를 발주하여 765,002㎡면적을 우선 부지조성공사를 하는 등 광주·전남 상생발전의 역사적 기본틀을 만들어가기 위한 새로운 성장거점 도시로 육성해 가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착공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의 꿈이 결실로 맺어지는 역사적인 출발점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

나. 공사착공(기공식)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기공식을 대통령 및 주요인사 1,500명을 모시고 혁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새로운 희망의 역사적인 행사를 가졌다. 한국전력, 한국농촌공사 등 17개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조성되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기공식은 '상생의 터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정부 관계자와 주민 등 참석, 축하공연과 기념발파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광주시·전남도 2개 광역단체가 공동 추진하는 점을 강조해 양 지역의

상생발전을 염원하는 공연도 함께 벌어졌다. 특히, '유비쿼터스 도시'로 건설되는 혁신도시는 주민들이 행정, 방재, 환경, 치안 등의 각종 서비스와 생활정보를 실시간 제공받고 가족친화적 도시로 조성된다. 공동혁신도시는 2010년 선도기관 이전을 시작으로 2012년 공공기관 이전이 모두 완료되면 에너지와 농생명 산업 등을 기반으로 한 호남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중심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명칭 "빛가람도시" 확정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브랜드화 및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 명칭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공동혁신도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빛가람도시"로 확정하였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단장 나도팔,
이전기획담당 이영만, 담당자 강희상

7-3. 혁신도시건설을 위한 행정지원

가. 이전기관 및 임직원 지원계획 수립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전과 임직원이 순조롭게 나주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이전기관 종사자들과 자녀를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및 각종 세금에 관한 인센티브 부여 등 36건의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공공기관 임직원과 지역민의 하나 되는 혁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다.

나. 보상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반 편성 운영

(1) 보상추진협의회 구성·운영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보상추진협의회 구성은 공익사업을 위한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2조(보상협의회)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44조(보상협의회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따라 '07. 4. 18일 위원장(나주시 부시장)을 포함한 18인으로 구성하여 제1회 보상협의회를 실시하였으며, '07. 12월까지 6회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보상협의회에서는 주변 토지가를 반영한 현실가 보상, 축산업 등에 대한 폐업보상, 이주대책 주민의 실정에 맞게 수립, 나주배 브랜드가치에 대한 보상, 공원묘지 조성 등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다.

다. 보상협의 전담반 편성·운영

보상협의 전담반을 편성하여 편입 지장물 조사 및 향후 보상관련 추진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대주민 설득 및 보상협의와 편입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함으로써 공감대 형성과 '08. 11월 조기착공을 위한 주민보상대책위원회와 주민의 이해·설득 노력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1회 방문으로 보상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협의보상에 따른 구비서류 발급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휴일에도 업무지원을 실시하였다.

라. 보상금 안정적 관리안내 홍보물 제작 배부

혁신도시 건설에 토지, 건물 등 재산이 편입되어 보상금 수령후 관리를 소홀이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이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역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상품 안내서를 제작하여 '07. 8. 20일 1,000부를 배부하였다. 공동혁신도시 사업현황 및 추진일정, 보상금 수령방법과 금융, 법무, 세무 등 상담안내, 금융기관별 추천상품 등 수록된 홍보물을 보상대상 전세대와 주민보상대책사무실, 사업시행사, 금융기관 등에 비치하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혁신도시 예정지 편입주민 신도시 및 이전공공기관 방문

수도권 근교의 신도시를 시찰하고 혁신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함으

로써 이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이전공공기관을 방문, 상호 이해를 통한 상생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민보상대책위원 30명과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 53명을 모시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동탄신도시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촌공사, 한전KDN을 '07. 9. 4일 방문하여 이주민과 이전공공기관, 지자체와 사업시행사가 화합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바. 이전공공기관 임직원·가족 문화탐방 실시

우리 도내로 이전하는 18개 공공기관의 직원과 가족들을 초청하여 남도문화탐방을 추진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이전지역 주민과의 상호 유대 강화를 위해 '06년부터 실시하였다, 2007년에는 18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 255명을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가 공동으로 초청 천연염색문화 체험,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관람, 가족단위 체험행사 등 문화탐방을 실시하여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단장 나도팔,
혁신지원팀장 김광춘, 담당자 김철홍

7-4 혁신도시건설을 위한 시설지원

가. 공동혁신도시 기본구상

(1) 배경 및 목적

수도권 과밀해소, 일극 중심의 국토개선 및 지방도시의 경쟁력과 활력을 주고, 국토 공간의 재편성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주·전남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조화된 개성있는 성장거점 도시 건설을 위한 혁신도시 기본구상을 하였다.

(2) 기본구상 개요

○ 위　　치 : 전남 나주시 금천면·산포면 지역 일원
○ 면　　적 : 약 380만평(계획인구 : 5만명)
○ 입주기관 : 한국전력, 한국농촌공사 등 17개 기관
○ 기　　간 : '06. 5. 2 ~ '07. 2. 1(9개월)
○ 기본구상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개발기본구상(안)작성	- 개발수요분석 - 토지이용, 교통, 공원녹지 등 구상
개발수요분석	- 시설별 입지선호도 조사 및 개발 수요분석 - 적정규모 및 개발밀도 추정
산학연 유치 및 혁신클러스터 육성방안	- 지역 혁신체계 구축방안 및 파급효과 - 해외사례 검토

(3) 기본구상 내용

1) 개발컨셉

"빛과물이 하나되는 상생의 생명도시 Green-Energypia"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클러스터 조성하여 혁신지구 중심의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과 혁신지원 테크노파크, 대학 R&D 연관배치한다. 혁신클러스터와 배후 주거벨트 조성으로 용도별 기능간 연계를 강화하여 상업기능의 선형배치를 통한 교류공간 조성 및 도시의 활력을 형성한다. 자연지형을 적극 활용하고 도시내 수자원을 활용한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녹지네트워크와 일체화된 수체계(Blue-Network)를 구상한다.

2) 혁신도시 미래상

이전공공기관과 지역전략산업의 연계로 지역발전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산·학·연·관 연계를 통해 **혁신을 창출하는 거점도시**를 만들겠다.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구조와 교통체계 구축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전원도시**를 만들겠다.

공영형 혁신학교 설치 등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과 문화적 개방성과 다양성을 촉진하고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창조적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학습과 창의적 교류가 가능한 교육·문화도시**를 지향한다.

3) 도시개발 규모

인구밀도는 인구규모와 함께 혁신도시 도시면적을 결정하고 도시환경의 쾌적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임으로 자연경관 보전, 쾌적한 주거환경 등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주거지 인구밀도는 지역여건에 따라 250~350인/ha 수준의 중·저밀도 개발이 바람직하다.

혁신도시 전체 개발규모는 계획인구 수용을 위한 도시규모, 이전기관 소요면적, 산·학·연 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면적, 유보지 등으로 구성한다.

4) 산·학·연 유치 및 연계방안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된 기업을 우선 유치하고, 지역의 전략산업과 관련된 산·학·연을 유치하여 자생적인 혁신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혁신클러스터는 확보를 위해 지식기반산업 중심의 전략산업과 관련된 산·학·연 유치가 필요하다.

※ 유치대상
- 지역전략 산업 관련 연구기관 및 분원
- 기업의 부설연구소를 유치하여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 유도
- 대학, 연구 개발형 기업, 벤처기업 등

혁신주체 유치를 위하여 마케팅 대상을 구체화한 후 마케팅 대상별로 차별화된 유치전략을 수립하여 이전 공공기관-대학-기업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5) 교통체계 및 정보통신망 구축

저공해 교통수단이 혁신 중심지구를 끊임없이 순환하여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혁신중심지구 순환교통 체계를 구축한다.

녹지축과 연계한 자전거 및 보행자 도로망을 도시전역에 조성하고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통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인간존중의 녹색교통체계를 구축한다.

광대역 통합 통신망을 기반으로 u-home, u-education 등 필요한 생활정보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생활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유비쿼터스 등 최첨단 미래형 디지털 도시를 조성한다.

(4) 앞으로 추진계획

기본구상을 토대로 행정구역 경계, 도시계획상 용도지역, 지형,지세 등 자연적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예정지구 지구경계를 설정할 계획이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단장 나도팔, 시설지원담당 김광현, 담당자 류택열, 김형민

나. 개발예정지구 지정

(1) 지구지정 필요성

본 지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실현 및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 구축을 통한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전국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이전이 계획된 혁신도시 예정지로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실현하고,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정주기반 강화를 위해 개발이 필요하다.

(2) 지정현황

○ 위　　치 : 전남 나주시 금천면 광암리·동악리·석전리·신천리·월산리, 산포면 매성리·송림리·신도리일원
○ 시 행 자 : 한국토지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
○ 면　　적 : 7,315천㎡(221만평)

지정제안	지구지정	비　고
7,575천㎡(2,291천평)	7,315천㎡(221만평)	감 26천㎡(81평)

○ 용도지역 : 관리지역 4,949천㎡(67.7%), 농림지역 2,366천㎡(32.3%)
○ 사업기간 : 2007년 ~ 2012년
○ 사 업 비 : 약 14,181억원
○ 고 시 일 : 2006년 11월 23일

(3) 지구지정 효력

지구지정 고시일부터는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제한을 받게 되었다.

행위제한 내용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및 토지분할, 나무의 식재 행위 등이 있다.

(4) 앞으로 추진계획

공동혁신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승인되어, 2007년 11월 착공식을 시작으로 2012년까지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완료를 할 계획이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단장 나도팔,　시설지원담당 김광현,
담당자 류택열, 김형민